당원용



한나라당이 아이들의 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누가 아이들의 꿈을 빼앗았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누가 아이들의 꿈을 빼앗았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이게뭡니까?!



이게뭡니까?!


위로
이곳으로
노무현식
교육정책!
갈팡질팡
STOP
우측으로
뒤로
학 원
다시
다 시
학력저하
격 차
평준화
옆으로
공사중
밑으로
입시
정책

누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빼앗았나

목 차



Ⅰ 노무현 정권 교육정책은 실패했다

1. 노무현 정권 들어 급증한 해외교육 열풍
   1) 한국에서 교육을 포기한 사람들 ····· 13
   2) 교육이민으로 인한 가정파탄 ····· 18

2. 노무현 정권의 '사교육 공화국'
   1) 참여정부 들어 사교육비 계속 증가 ····· 20
   2) 교육이 세습화되고 있다 ····· 25
   3) 사교육비로 막대한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 ····· 26

3. 노무현 정권 사교육비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1)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사교육비만 더욱 늘렸다 ····· 29
   2) 사교육비 대책 실패를 입증한 설문조사 결과 ····· 31

4. 노무현 정권은 지역 · 학교간 학력격차를 심화시켰다
   1) 학력격차가 세습되고 있다 ····· 34
   2) 지역간 학력격차를 심화시켰다 ····· 39
   3) 학교간 학력격차를 심화시켰다 ····· 46

Ⅱ 노무현 정권의 '사학파괴법'

1. 정부의 개정사학법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전교조의 좌파이념으로 바꾸려는 법이다
   •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왜 순교를 각오한 단식 삭발농성에 들어갔는가? ····· 51

2. 사학비리는 척결하되 진정한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날치기 사학법안의 문제점
   1) 지나친 사학규제, 선진국에서는 유래가 없다 ····· 52
   2) 사학의 본질적 자율인 사립학교 경영권 침해는 위헌이다 ····· 52
   3) 국가재정 지원을 이유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요구함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 53
   4) '공공복리'를 이유로 사학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부적절하다 ····· 54
   5) 날치기 사학법으로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만 높였다 ····· 54
   6) 독소조항은 제거되어야 한다 ····· 54

3. 노무현 대통령은 날치기 사학법을 즉각 재개정하라
   1) 개정사학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법 ····· 56
   2)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거부하는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再개정안 수정내용 ····· 56

4. 국민 모두는 날치기 사학법 재개정을 원한다
1) 여론조사 결과 再개정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63.5% ····· 57
2) 개방형 이사제는 제3의 기구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하자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 57
3) 열린우리당 의원도 인정하는 하자 있는 날치기 개정사학법 ····· 58

5. 한나라당 재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Ⅲ 전교조를 통한 편향된 교육을 방치했다

1. 좌파 전교조의 편향된 교육실태
1) 좌파 전교조 교육받은 학생, "북한 핵무기에 자긍심 느꼈다" ····· 63
2)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 64
3) 좌파 전교조는 '폐쇄적 자주' 논리를 주입시켰다 ····· 65
4) 파병 · APEC · 북핵 등 현안마다 좌편향 교육으로 일관했다 ····· 65
5)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참석했다 ····· 69

2. 전교조가 교육정책 개혁에 앞장서 반대했다
1) 전교조 입김에 교육개혁정책이 좌초됐다 ····· 70
2) 과다하게 교육정책에 개입했다 ····· 73

3. 전교조, 교육은 없고 이념만 추구한다
1) 기득권 수호 집단으로 변한 전교조 ····· 77
2) 교사라기 보다 좌파 정치인이다 ····· 78

Ⅳ 노무현 정권의 대학 입시정책은 실패했다

1. 대입제도 혼선으로 부작용을 심화시켰다
1) 노무현 정부 대입제도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입시생들 혼란을 가중시켰다 ····· 83
2) 2006년 학교현장에서는 예견되었던 부작용이 발생되었다 ····· 89

2. 대학 입학정책 실패로 피해입은 학생들
1) 고교간 학력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90
2) 수능 9등급제의 대입제도 한계로 고교등급제 혼란 ····· 92
3) 내신 부풀리기 무방비 ····· 93
4) 획일적 수능제도 ····· 94
5) 학생의 대학선택권 제한 ····· 95
6) 대입제도를 수시로 바꾸어 혼선가중 ····· 95

3. 선진국의 대학입시제도에서 배워야 할 점
1) 미국의 대학입시제도 96
2) 영국의 대학입시제도 98
3)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100

Ⅴ 노무현 정권은 학교폭력을 심화시켰다

1.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실패했다
1) 학교폭력은 나날이 더 잔혹해지고 있다 105
2) 문제학생의 학교장 직권 전학이 갈수록 늘고 있다 108
3) 힘 없는 초등학생과 여학생 피해 늘어간다 109
4) 폭력서클이 부추기는 학교폭력 111

2. 학교폭력 대책 이래서 실패했다
1) 피상적 사후대책에만 치중했다 112
2) '인권교육'을 경시했다 112
3) 상담 및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경시했다 112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미흡했다 113
5) 학교폭력예방교육이 미흡했다 113

노무현 정권
교육정책은 실패했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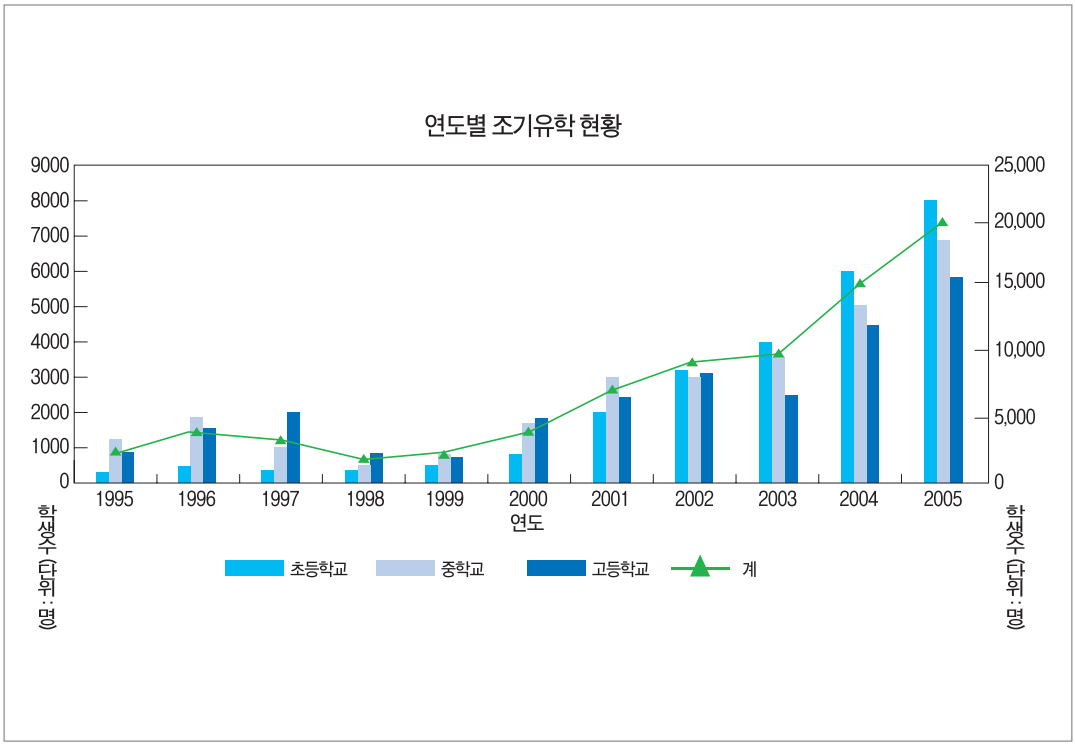
노무현 정권 교육정책은 실패했다



1. 노무현 정권 들어 급증한 해외교육 열풍

1) 한국에서 교육을 포기한 사람들

〈연도별 · 학교급별 조기유학 현황〉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① 조기유학 1998년 이후 7년새 13배 증가

○ 조기유학 2만명 돌파

: 교육부가 올해 10월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05.3 ~ '06.2 유학을 위해 출국한 초 · 중 · 고 학생은 모두 2만400명으로 지난해(1만6,446명)보다 24%나 증가

○ 2001년부터 최근 4년 간 증가 추세를 보면 초등학생이 2,107명에서 8,148명으로 6,041명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학생은 3499명, 고등학생은 2,916명 증가

학년도	초	중	고	합 계
2001	2,107	3,171	2,666	7,944
2002	3,464	3,301	3,367	10,132
2003	4,052	3,674	2,772	10,498
2004	6,276	5,568	4,602	16,446
2005	8,148	6,670	5,582	20,400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5학년도 원인별 출국현황〉

구 분	계	美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	인정유학	자비유학
인원(명)	35,144	14,812	6,831	7,913	6	5,582
백분율(%)	100.00	42.14	19.44	22.52	0.02	15.88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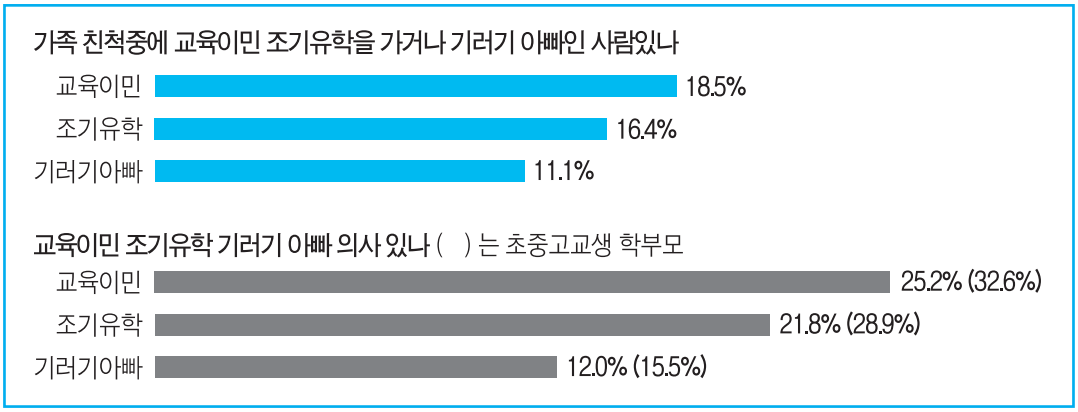
② 美대학 한국 대학생 8만7,724명으로 세계 1위

○ 미국 국토안보부(DHS)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 감시시스템(SEVIS)에 등록돼 있는 한국인은 모두 8만7,724명으로 2위 인도(6만8,451명), 3위 중국(5만4,486명) 등을 제치고 국가별 1위를 차지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한인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 중 11.2%를 차지하여 일본(9천97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유학생 집단

○ 증가율 면에서 한인 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상위 20위 국가 중 10%의 상승률을 보여 네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③ 국민의 25% “기회 된다면 교육이민 가겠다”



– 출처: 동아일보

○ 올해 초(3월) 동아일보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회가 된다면 교육이민, 조기유학, 기러기 아빠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5.2%는 ‘교육이민을 가겠다’고 답변

○ 학부모의 32.6%가 ‘교육이민을 갈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고 조기유학, 기러기 아빠를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각각 28.9%, 15.5%나 됨

○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 조기유학을 가거나 기러기 아빠로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이민을 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18.5% 나왔고, 조기유학은 16.4%, 기러기 아빠는 11.1%로 나타남

○ 한편, 영어와 관련된 사교육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학교 급별로 초등학생 84.6%, 중학생 88.4%, 고교생 64.9%로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남

④ 경기도내 초 · 중생 “불법유학“ 급증세

○ 최근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 · 중 · 고등학생 유학생이 지난 2003년 8,544명, 2004년 1만177명, 2005년 1만1,808명으로 증가

○ 이 가운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초 · 중학생 불법 미인정 자비유학은 2003년 1 ,970명, 2004년 3,593명, 2005년 5,167명으로 매년 1,600명씩 증가

○ 지역별 불법유학 현황은

: 초등학생의 경우, 성남이 23.6%(768명), 고양 21%(683명), 용인 9.9%(321명)

: 중학생의 경우, 성남 18.5%(354명), 고양 18.1%(347명), 용인 10.2%(196명) 등 順으로 집계

○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자비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제26차 KEDI 교육정책포럼(2005)의 "조기유학의 국민의식과 실태"〉

1 학부모 3명중 1명이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고 싶다' 고 응답

○ 학부모들의 68%는 조기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하다고 응답

○ 학부모의 90%는 조기유학 학생의 수와 비용의 증가를 걱정

○ 3명 중 1명이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고 싶다' 고 응답

2 조기유학을 둘러싼 군중심리가 조기유학을 부추김

○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내니까 나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을 느낌

○ 따라서, 자녀의 특성이나 자질 등을 고려하기보다 남들이 다 갔으니 우리도 일단은 보내고 보자는 식의 사고가 학부모들 사이에 팽배함

○ 중요한 것은 이런 학부모들의 기대 심리는 현실에서 증명된다는 사실

☞ **한국 사회는 국내에서 얻은 교육에 비해 미국이나 다른 선진 서구 사회에서 얻은 교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두며, 외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직간접의 특별한 혜택을 누림**

3 조기유학 학부모들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학교문화실태를 문제로 지적

○ 특히, 이민을 동반한 조기 유학의 경우 학부모들이 한국의 학교와 교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

○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학부모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수용적이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합리적이고 깨끗한 교직 사회를 염원

○ 또 조기 유학을 나온 학부모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에서의 경쟁적인 입시 과정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아이들을 그 경쟁 과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고 싶은 동기가 깔려 있음

<한국의 교육이민 실태 관련기사>

"이제 내 조국 한국을 포기하고 싶다" (프레시안 03.09.08)

□ 이민 목적 1순위는 '교육'

○ 이민박람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이민 희망지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順

○ 이유는 이들 나라가 사회경제적으로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고, 좋은 교육시설이 많기 때문

○ 고등학교 2학년 딸과 함께 박람회를 찾은 40대 중반의 부부는 "딸이 입시교육에 치이는 것을 보면 항상 안타까웠다"며 "딸을 차라리 외국으로 대학을 보내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입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유학과 이민을 동시에 알아보러 왔다"고 언급

○ 익명을 요구한 30대 가장은 "8학군 출신이 서울대 등 명문대 합격생의 80%를 차지하는 현실이 말해주듯 한국은 이미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은 사회가 됐다"며 "이렇게 병들대로 병든 한국사회에서 과연 애들을 키우는 게 애들에게 좋은 일인가라는 고민 끝에 박람회장을 찾게 됐다"고 언급

□ 연간 해외유학비 송금액 1조원 넘었고 해마다 20~30%이상씩 급증 (한국은행 통계)

○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연간 해외유학비로 송금되는 액수만 1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해마다 20~30%이상씩 송금액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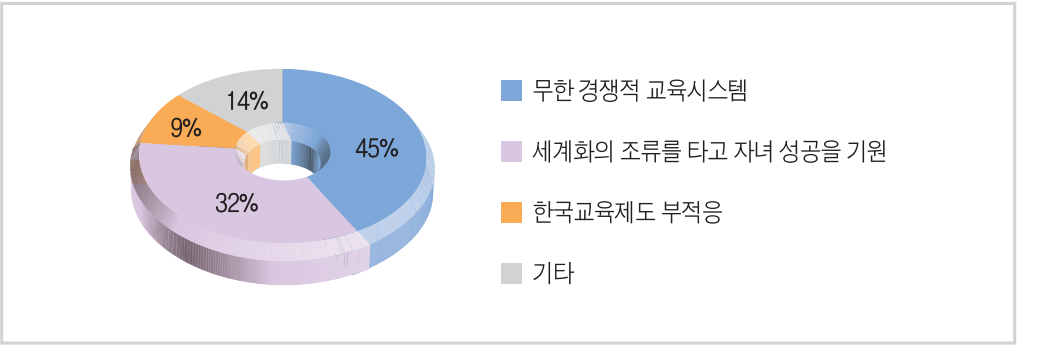
○ 현재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벤처기업체 CEO는 "교육만 해도 아무리 강남에서 살인적 사교육비를 들여 설령 서울대에 합격시켜 봤자 졸업 후에는 번듯한 일자리를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언급

2) 교육이민으로 인한 가정파탄

① 조기유학의 동기는 '세계화 교육'

○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게 된 주된 동기에 대해서는 '무한 경쟁적 교육시스템'(45%)과 '세계화의 조류를 타고 자녀성공을 기원'(3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특수 재능아, 장애아 등 한국교육제도 부적응(9%)등의 이유도 존재

〈조기유학 동기〉



○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외로움 등의 심리, 정서적 문제(4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건강관리(24%), 경제적 압박(17%), 사회적 인식(12%), 자녀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단절(10%) 등의 順으로 조사

○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2%), 실제로 도움을 받아본 경우는 8%에 불과

○ 기러기 아빠들을 위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모임참가 여부의 경우도 10명중 7명은(70%)은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모임은 22%, 오프라인 모임은 4% 順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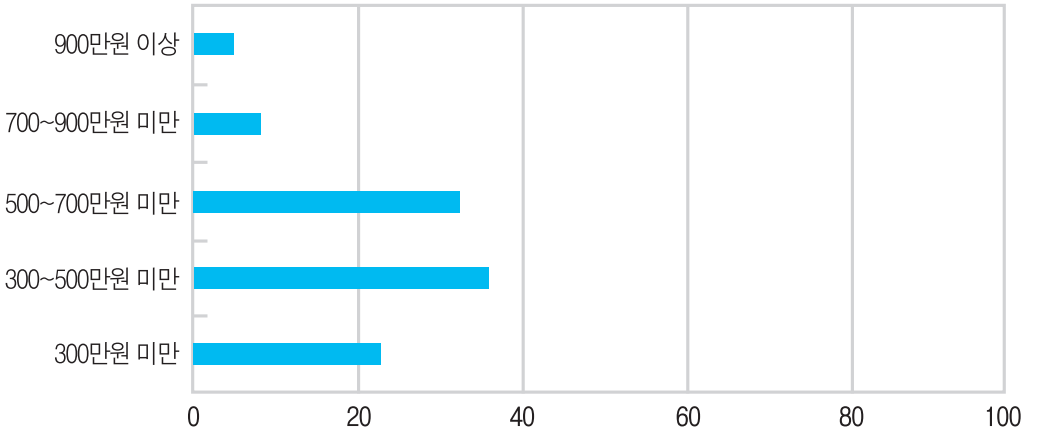
② 한국 교육실패의 자화상, 기러기 아빠들

☞ **기러기 아빠들 34%, 한달 300~500만원 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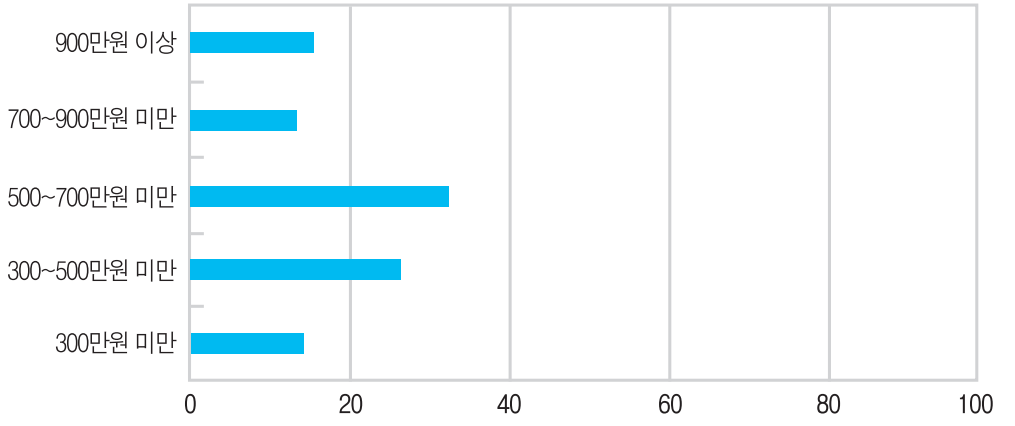
○ 기러기 아빠들의 경제적 상태는 월평균 소득의 경우, '500~700만원 미만'(32%)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300~500만원 미만'(26%)이라고 응답

○ 월평균 송금액의 경우, '300~500만원 미만'(34%)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500~700만원 미만'(30%), 300만원 미만(23%)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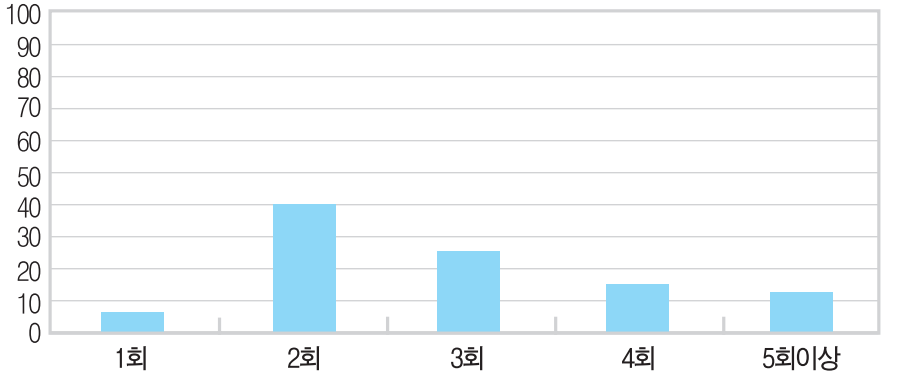
〈기러기 아빠들의 월평균 송금액〉



〈기러기 아빠들의 월평균 소득〉



〈자녀 및 배우자와 1년에 만나는 횟수〉



– 출처: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는 지난 4.1~5.26 한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아빠 150명을 대상으로 생활 및 의식실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③ 기러기 가정의 붕괴사례

제 목	기 사 내 용
"자녀들 조기유학 때문에…" 50대 가장의 눈물 (조선, 06.05.21)	•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54)에게 약을 먹이려다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힌 A씨(55)를 상해혐의로 붙잡아 조사 • A씨는 12년 전 어린 남매를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내면서 아내를 함께 동반시켰는데 자녀들은 미국 생활에서 잘 적응을 했지만 아내는 극심한 향수병과 우울증에 시달림 • A씨는 아내의 우울증이 심해지자 3년 전 국내로 돌아와 치료를 받음 • A씨는 사건 당일, 아내에게 약을 먹을 것을 요청했으나 아내가 거절하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손가락을 물음 • A씨는 경찰에서 "자식들은 미국 생활에 정착해 회사생활을 하는 등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다" 며 "하지만 아내가 아픈 상황이 되자 조기유학에 대한 후회가 밀려든다" 고 언급
기러기 아빠의 쓸쓸한 죽음 (조선, 05.10.19)	• 기러기 아버지 구모(53)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쯤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10평짜리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 • 구모씨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1년에 2500만원씩 송금하면서 월세방에 생활 • 직장 동료 김모(51)씨는 "지난 12일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찾아갔더니 문은 잠겨 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며 "경찰에 신고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미 숨져 있었다" 고 언급 • 경찰은 "부검 결과 구씨가 지병인 고혈압 등으로 인해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40대 '기러기아빠' 아버지 묘서 자살 (한겨레, 04.11.27)	•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색장동 야산의 묘소옆에서 백아무개(42)씨가 나무 5m 높이에 끈으로 목을 매 자살 • 백씨의 매형 김씨는 경찰에서 숨진 처남이 몇 년 전에 딸과 아들을 먼저 뉴질랜드로 유학 보낸 뒤 부인도 아이들을 함께 따라갔다며 지난 23일부터 연락이 안돼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장인묘소를 찾았다가 처남을 발견했다고 언급 • 경찰은 숨진 백씨가 아내와 자식을 외국으로 보낸 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2. 노무현 정권의 '사교육 공화국'

1) 참여정부 들어 사교육비 계속 증가

① GDP 대비 교육비(사교육비 포함) 비중 한국이 최고



▲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한 입시 전문학원에서 중등 교과과정 입원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출처: 국민일보)

○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88%로, 전체 회원국 평균인 0.66%의 약 4.4배

○ 사교육비까지 포함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체 교육비 지출비중은 7.06%로, 아이슬란드의 7.37%, 미국 7.23%, 덴마크 7.11%에 이어 4위를 기록

○ 미국이 1.89%로 2위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와는 1% 가까이 차이가 나며, 1%를 넘긴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개국에 불과

<OECD 국가별 GDP 대비 교육비 비중, 사교육비 포함>

국 가	공교육비	사교육비	합 계	국 가	공교육비	사교육비	합 계
아이슬란드	6.77	0.60	7.37	핀란드	5.89	0.11	6.00
미국	5.33	1.89	7.23	호주	4.44	1.53	5.97
덴마크	6.83	0.28	7.11	포르투칼	5.71	0.09	5.80
한국(4위)	4.18	2.88	7.06	오스트리아	5.42	0.26	5.67
노르웨이	6.66	0.26	6.93	헝가리	5.01	0.57	5.58
스웨덴	6.69	0.18	6.86	독일	4.44	0.89	5.33
뉴질랜드	5.58	1.19	6.77	이탈리아	4.59	0.32	4.91
벨기에	6.05	0.31	6.36	스페인	4.34	0.54	4.89
멕시코	5.12	1.14	6.26	일본	3.50	1.20	4.69
스위스	5.70	0.53	6.23	체코	4.19	0.24	4.43
폴란드	5.46	0.66	6.13	아일랜드	4.10	0.29	4.38
프랑스	5.69	0.38	6.07	그리스	3.88	0.19	4.06

– 출처: OECD Factbook. 2006

② 전체 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비중 53.2%

○ 통계청이 전국가구 가계수지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 2003년 교육비 지출 21만원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은 11만원으로 비중이 50.7%

: 2004년 교육비 지출 22만원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이 11만원으로 비중이 52.2%

: 2005년에는 교육비 23만원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이 12만원으로 비중이 53.2%

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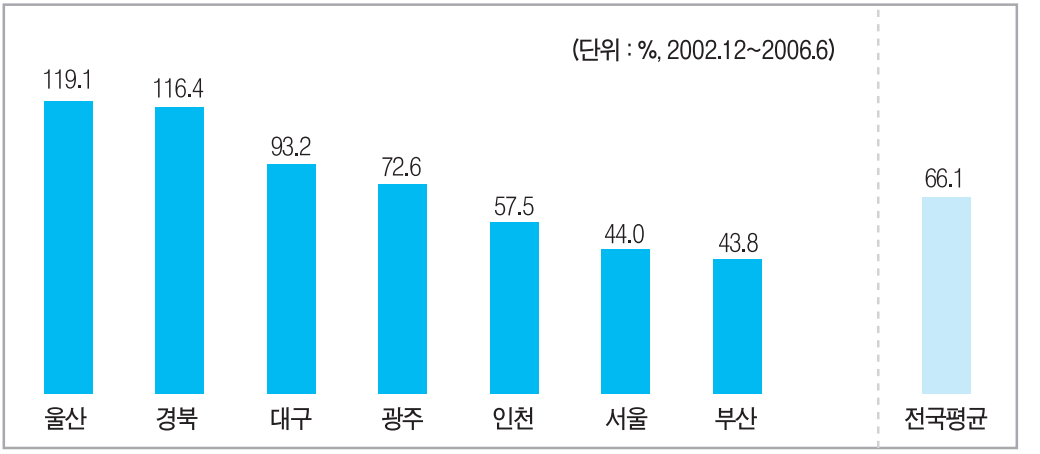
〈참여정부 이후 사교육비 비중〉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1/4분기	2006 2/4분기	2006 3/4분기
전체교육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충교육비 (사교육비 포함)	56.9	59.2	61.7	49.1	79.2	50.6
학원 및 개인교습비 (사교육비)	50.7	52.2	53.2	43.6	66.8	45.7

– 출처: 통계청

〈現 정부 출범이후 주요지역별 입시 · 보습학원 증가율〉



– 출처: 세계일보

③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3년 전보다 9만2천원 증가

○ '06.7~9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4만2천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33만원으로 지난 2003년 한국교육

개발원의 사교육비 조사 자료(23만8천원)보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9만 2천원이 증가 (출처 : 이주호 의원실)

○ 고교생의 경우에는 13만8천원이 증가('03년 한국교육개발원조사 29만9천원, '06년 이주호 의원실 조사 43만7천원)

☞ 초 · 중 · 고 전체적으로는 38.7%, 고교생의 경우 46.2%의 수준의 사교육비 증가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구 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기타	전체
초등학교	평균	10.8	12.3	8.8	5.5	4.9	10.8	11.8	26.4
	사례 수	1,376	2,489	2,174	977	877	1,130	1,323	3,872
	표준편차	42.2	10.7	8.7	6.1	5.3	28.3	11.4	36.6
중학교	평균	8.0	13.1	12.7	7.0	5.9	11.4	21.0	32.1
	사례 수	995	1,933	1,959	963	760	266	669	2,696
	표준편차	19.1	12.7	12.2	8.4	6.3	12.2	19.7	28.6
고등학교	평균	20.3	20.8	22.7	17.0	12.4	33.4	22.2	43.7
	사례 수	760	1,570	2,083	461	183	161	192	2,631
	표준편차	46.0	19.2	17.9	31.4	15.1	59.1	25.4	53.1
전체	평균	12.2	14.8	14.7	8.3	6.1	13.2	15.5	33.0
	사례 수	3,131	5,992	6,216	2,401	1,820	1,557	2,184	9,199
	표준편차	37.9	14.5	14.7	15.8	7.6	31.8	16.6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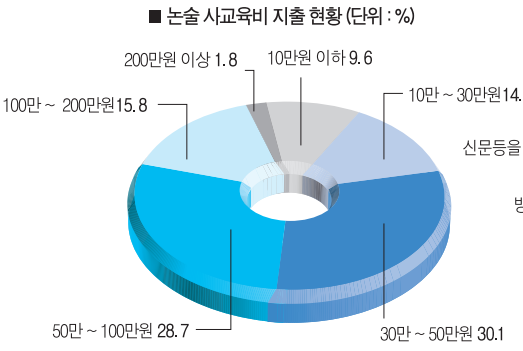
– 출처: 이주호 의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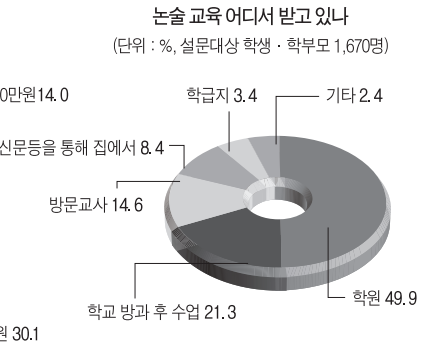
④ 논술형 고사 도입이후 개인교습 시장 '5조원' 규모

○ 지난해 국내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19조2,400억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반을 차지

○ 특히, 대학들이 논술형 고사 도입방침을 밝힌 2004년 이후 개인 교습비는 5조원을 웃돔

○ 2003년 31만원이던 가구당 개인 교습비는 지난해 41만6천원으로 증가





– 출처: 세계일보, 한국경제

⑤ 사교육비 격차 확대 사례

○ 올해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어학원을 현장 조사한 결과 5~7세 어린이나 초등학교 1학년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A영어학원에 들어갈 경우 한 달 수강료로 138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용산구 B어학학원의 경우 입학할 때 3개월을 기본으로 수강료를 내야 하는데 5세 기준으로 학원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3개월 동안 404만원에 이름

○ 서울시내 유아영어학원은 모두 235곳인데 이중 강남구와 서초구에 67곳이 위치하는 등 강남지역에 편중

⑥ 美 조기유학 SAT학원의 고액과외 1년짜리 패키지가 3,450만원

○ 미국 조기 유학생을 대상으로 SAT 대비반을 운영하는 서울 강남역의 E어학원은 미국에 다니는 한국인 고3(미국 학제로는 12학년) 유학생이 미국 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때까지 1년에 3,450만원을 받음

○ 고2 학생은 2년 동안 3,950만원, 중3 학생은 4년간 5,950만원

○ SAT 개인과외가 비싼 것에 대해 학원 관계자들은 "우선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언급

☞ **가정이 비교적 부유한 조기 유학생이 타깃**

해외에 비친 한국의 사교육 열풍

비즈니스위크지 (조선, 06.12.04)

• 잡지는 지난달 25일 온라인 사교육기업 메가스터디가 학생 및 학부형과 만남을 가진 행사를 소개하며 '강사가 100만불을 벌 수 있는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냄

• 비즈니스위크(BW) 최신호는 한국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어떠한 시련도 감수한다고 전함

⇒ "한국에서 명문 대학은 좋은 직장을 보장할 뿐 아니라 심지어 훌륭한 배우자와 평생 안락한 인생을 보장해주지만 이 같은 명문대학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유명 학원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한 달에 과목당 90만원 이상(1,000달러)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 BW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6000달러(약 1500만원)수준인 한국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라고 꼬집음

2) 교육이 세습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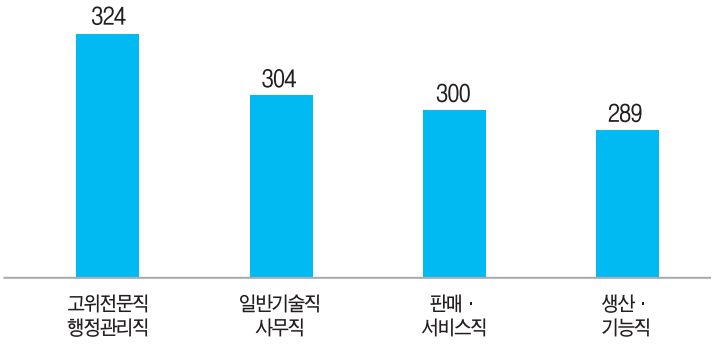
① 부모 직업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다

○ 학부모 직업별로 살펴보면 교수가 월 평균 52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농 · 임 · 어업 종사자의 경우 월 평균 21만1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사교육비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함

▶ 고려대 김경근 교수(교육학)가 지난해 분석한 부모 직업별 수능 성적은 '전문직 · 관리직 324점, 일반기술직 · 사무직 304점, 판매 · 서비스직 300점, 생산 · 기능직 289점' 으로 나타남

부모의 직업과 수능성적

자료 : 고려대 김경근 교수 (2005년)



〈학부모 직업별 사교육비 지출비〉

(단위 : 만원)

구 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기타	전체
교사	평균	15.0	18.1	17.2	10.6	6.6	11.5	15.5	36.6
	사례 수	148	339	339	122	71	104	82	504
	표준편차	43.3	19.5	13.0	9.7	7.1	7.7	13.9	37.1
교수	평균	20.7	23.9	22.7	13.3	8.0	16.1	15.4	**52.0**
	사례 수	41	86	89	32	12	30	24	121
	표준편차	20.0	24.7	20.3	11.6	13.6	18.7	13.4	58.5
전문직	평균	17.9	18.2	17.9	11.2	6.5	11.0	18.8	43.2
	사례 수	161	269	304	122	83	90	86	410
	표준편차	59.0	14.6	15.9	14.5	5.6	9.5	30.2	50.9

공무원	평균	11.4	14.8	14.7	8.3	7.2	19.0	13.8	33.6
	사례 수	292	561	597	206	141	139	193	875
	표준편차	17.5	12.6	14.4	8.7	10.5	78.0	11.7	43.8
회사원	평균	12.9	14.1	13.6	8.2	5.6	12.2	15.2	32.8
	사례 수	1,172	2,185	2,181	857	685	568	813	3,225
	표준편차	44.7	12.9	12.2	22.7	5.7	15.8	13.2	39.3
자영업	평균	10.4	15.7	16.0	8.2	6.5	16.3	17.1	34.9
	사례 수	693	1,358	1,467	575	426	304	432	2,057
	표준편차	23.1	17.2	18.2	11.1	10.0	41.6	20.7	45.6
농·임·어업	평균	6.6	9.5	10.4	4.9	5.1	10.5	11.2	21.1
	사례 수	74	128	142	52	48	39	66	229
	표준편차	9.1	6.8	9.9	4.1	5.3	11.2	8.0	15.4
기타	평균	10.1	12.4	12.7	7.0	5.8	10.3	14.7	27.0
	사례 수	520	991	1,035	411	335	267	467	1,671
	표준편차	31.7	11.1	13.4	7.7	6.4	10.6	11.3	29.3
전체	평균	12.0	14.8	14.7	8.3	6.0	13.2	15.4	32.9
	사례 수	3,101	5,917	6,154	2,377	1,801	1,541	2,163	9,092
	표준편차	36.8	14.5	14.7	15.9	7.6	32.0	15.5	40.3

– 출처: 이주호 의원실

② 월 소득 수준별 교육격차가 증대되었다

(단위 : 만원)

월 소득수준	연간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저소득층(150만원 미만)	151
중하층(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18
중상층(30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308
상층(450만원 이상)	435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연구

○ 부모의 소득수준별 수능 성적도 5백만원 초과때 317.6점이고, 2백만원 이하는 287.7점으로 교육양극화가 대물림

3) 사교육비로 막대한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

① 사교육비 유무에 따른 교육투자 효율성 비교

○ GDP에서 공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PISA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소양점수의 합계를 각각 지수화하여 투자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PISA 2000과 PISA 2003에 대한 교육투자의 효율성에서 우리나라

는 공히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

○ 효율성 지표는 2000년의 124.5에서 2003년에는 132.0으로 나타나 7.5점 상승하였고 흔히 교육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북유럽의 국가들보다도 공교육투자의 효율성이 높음

○ 그러나, 사교육비와 공교육비를 모두 합한 경우의 교육투자 효율성은 공교육비만을 감안한 위의 경우, PISA 2000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투자 효율성 지표가 85.3으로 19위, PISA 2003에서는 88.2로 17위에 머물러 사교육비를 감안하지 않은 경우와 대조를 이룸

☞ 2000년에 비해 2003년에 순위의 상승이 2단계 있었지만, 조사대상 22개국중 하위, 약 20% 수준에 머무름

○ 다른 회원국들이 사교육비의 감안 유무와 관계없이 대체로 순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큰 폭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공교육의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일본은 이 경우에도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103.5와 132.9의 효율성을 나타내며 1위, 2위를 차지하여 큰 변동이 없음
- 네덜란드는 2000년에는 127.0으로 2위, 2003년에는 120.3으로 3계단 하락한 5위를 기록하여, 사교육비를 감안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도별로 각각 한 계단씩 상승
- 함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던 아일랜드, 체코 또한 큰 변동 없이 5위 이내에 위치

<사교육비를 감안하지 않는 경우, 교육투자 효율성>

순 위	Pisa 2000		Pisa 2003	
1위	일본	154.3	일본	158.1
2위	한국	124.5	한국	132.0
3위	네델란드	123.4	체코	126.8
4위	아일랜드	120.1	아일랜드	125.8
5위	체코	118.5	그리스	122.0
6위	그리스	118.5	네델란드	117.0
7위	독일	111.7	독일	115.7
8위	헝가리	108.6	스페인	114.3

9위	스페인	108.5	이탈리아	106.1
10위	미국	101.6	헝가리	101.3
11위	이탈리아	100.9	핀란드	94.7
12위	벨기에	97.1	오스트리아	94.0
13위	핀란드	95.1	미국	93.3
14위	스위스	93.9	스위스	93.2
15위	오스트리아	93.6	폴란드	92.4
16위	폴란드	88.8	프랑스	91.8
17위	프랑스	86.7	벨기에	87.6
18위	노르웨이	83.6	포르투갈	83.5
19위	멕시코	83.1	멕시코	78.8
20위	포르투갈	79.3	스웨덴	77.6
21위	스웨덴	79.2	노르웨이	75.1
22위	덴마크	75.2	덴마크	74.0

〈사교육비를 감안한 경우, 교육투자 효율성〉

순 위	Pisa 2000		Pisa 2003	
1위	일본	130.5	체코	135.2
2위	네델란드	127.0	일본	132.9
3위	그리스	124.9	아일랜드	132.6
4위	아일랜드	122.3	그리스	131.3
5위	체코	119.9	네델란드	120.3
6위	헝가리	107.7	스페인	114.6
7위	스페인	107.4	이탈리아	111.8
8위	핀란드	105.1	독일	108.8
9위	이탈리아	104.6	핀란드	104.9
10위	독일	101.9	헝가리	102.6
11위	벨기에	101.8	오스트리아	101.3
12위	폴란드	99.9	프랑스	97.1
13위	오스트리아	99.2	스위스	96.1
14위	스위스	98.0	벨기에	94.0
15위	노르웨이	92.7	폴란드	92.9
16위	프랑스	91.4	포르투갈	92.7
17위	포르투갈	87.9	한국	88.2
18위	스웨덴	86.3	스웨덴	85.3
19위	한국	85.3	노르웨이	81.5
20위	덴마크	81.2	덴마크	80.2
21위	멕시코	80.2	미국	77.7
22위	미국	78.0	멕시코	72.7

– 자료 : OECD의 PISA 2000, 2003과 「Education at a Glance 2003, 2005」의 학업성적과 교육비를 지수화하여 투자대비 성과로 효율성을 추정 (LG주간경제 880호, '06.04.14)

② 영어 사교육비 15조… 실력은 아시아 12개국 중 꼴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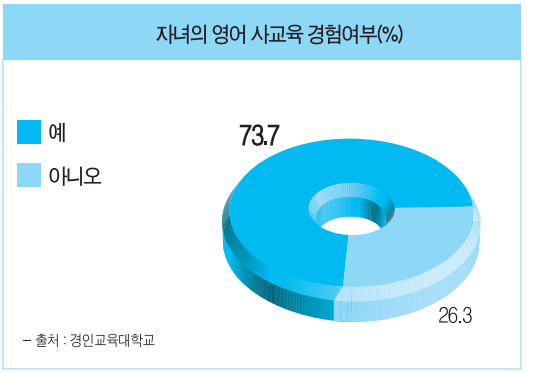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우리나라 영어 관련 투자액이 사(私)교육비 14조3,000억원, 평가비용 7,000억원 등 약 15조원으로 추정

☞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806조6,000억원의 1.9%, 교육예산 30조1,000억원의 47.5%에 해당하는 규모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인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61개국 중 35위로 평가했고, 동아시아 국가의 경영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경제위험컨설팅(PERC)은 한국을 아시아 12개국 중 영어 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로 지목

☞ 방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그 결과는 형편없음





3. 노무현 정권 사교육비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1)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사교육비만 더욱 늘렸다

① 실효성 없는 재탕 · 삼탕의 2 · 17 사교육비 대책

○ 2 · 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 EBS 수능 방송, 인터넷방송 확대 ▲ 방과 후 특기 · 적성활동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를 뼈대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내용은 97년에 보도된 아래의 기사로 '바꿔치기' 할 수 있을 정도의 '재탕' 대책

<안병영 前 교육부총리가 97년 교육부장관 재직시절 발표한 '과외비 경감대책'>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12일 국회에 보고한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에서 오는 8월부터 중 · 고교 교과목을 가르치는 과외 전문 위성방송을 실시하고…또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97.5.13, 한겨레)

○ 교육부는 97년 전 '과외근절 대책'에서 "방과 후 교내 과외활동으로 6조8,000억원(당시 한해 과외비인 9조6,000억여원의 70%) 이상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생긴다"고 주장

○ 그러나, 교육부가 2?17대책을 내놓긴 전인 2003년 과외비는 13조6,000억원으로 당시 안병영 장관의 처방전이 실패로 드러남

○ 교육부는 2002년에도 '사교육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당시 3월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 가운데 '과외수요 흡수 방안'은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거의 비슷하며 그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

<2002년 공교육내실화 대책의 한 부분>

-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영역, 시간, 관리방법, 수당 등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자율결정)
- 교육방송(EBS) 등 ICT 활용 활성화(에듀넷 사이버교육 서비스 강화, 수능교육방송 능력별 3단계 편성 및 VOD 제공)

○ 교육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고교 내신점수 강화와 학벌주의 극복 등을 들고 있지만 고교내신 점수 강화방안 또한 이미 90년대 말에 발표된 바 있음

② 참여정부 사교육 대책 이후 입시학원 오히려 66% 늘었다

○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교육 정책으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최근까지 학원 수는66% 늘어남

③ 전국 사설 입시 · 보습학원이 초 · 중 · 고 숫자(1만889개)의 2.5배

○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늘어 2만7,724곳에 이름

○ 지역별로 보면 학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은 4,080개에서 6,216개(52%)로, 경기도는 2,778개에서 6,221개(123%)로 증가

○ 증가율 면에서는 제주도(420%) 울산(186%) 경북(167%) 대구(162%) 경남(160%) 등 지방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도권을 압도

○ 연도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8학년도 대입전형 변화가 예고된 2004년 이후 급증세가 두드러짐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000~3,000개 수준이던 신설학원 수는 2004년 3,243개, 2005년에는 4,044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6년 상반기에만 1,622개 입시학원이 새로 문을 염**

④ 다시 "특목고 사교육" 광풍

○ 9,800여명이 입학정원인 전국의 외고와 과학고 지원자는 지난해 3만 2,000여명이었으나, 올해는 4만~5만명에 이를 것으로 학원가는 예상

☞ **정부가 '특목고 죽이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음**

○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J학원이 올해 9월 20일 개설한 외고 특강반은 하루 만에 700명 정원이 모임

○ 서울 대치동 J어학원 문모(32) 실장은 "서울대 요강이 나온 후 하루 수십 건씩 상담이 늘고 있다"며 "올해엔 중위권 학생들마저 '특목고 열풍'에 휩쓸리는 분위기"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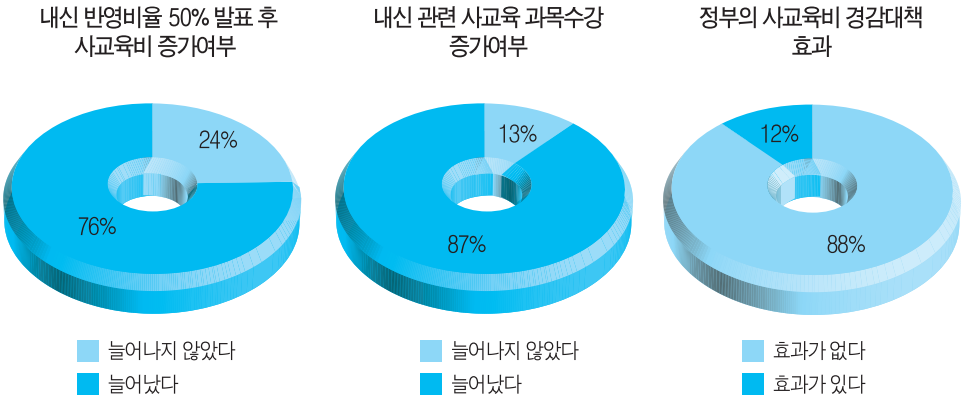
○ 초등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최모씨는 "특목고에 들어 가려면 5~6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생각"이라고 언급

2) 사교육비 대책 실패를 입증한 설문조사 결과

① 사교육비 오히려 76% 증가(서울시 고등학교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 올해 9월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 7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결과 2008년 대학입시 내신 50% 이상 반영 발표 이후에, 서울의 학부모 76%가 사교육비 증가

(자료 : 이군현 의원실)



② 학부모 42%가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 하나도 효과 없다고 응답

○ 최근에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자료 : 이주호 의원실)

○ 학부모의 42%는 최근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효과적인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인식

○ 초등학교에서는 그나마 방과 후 학교 확대가 사교육비를 경감시켰다고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EBS가 사교육비를 다소나마 경감시켰다고 인식

구 분		방과 후 학교	2008년 대입전형	본고사 금지	EBS	수준별 이동수업	효과적인 정책없음	전 체
초등학교	명	1,400	396	159	1,154	294	**2,565**	5,968
	%	23.5	6.6	2.7	19.3	4.9	**43.0**	100.0
중학교	명	649	359	111	1,300	353	**1,902**	4,674
	%	13.9	7.7	2.4	27.8	7.6	**40.7**	100.0
고등학교	명	574	278	213	1,389	171	**1,916**	4,541
	%	12.6	6.1	4.7	30.6	3.8	**42.2**	100.0
전체	명	2,623	1,033	483	3,843	818	**6,383**	15,183
	%	17.3	6.8	3.2	25.3	5.4	**42.0**	100.0

○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정부 사교육비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

<학부모 학력별 사교육비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구 분		방과 후 학교	2008년 대입전형	본고사 금지	EBS	수준별 이동수업	효과적인 정책없음	전 체
초등학교 졸업	명	56	19	6	81	21	68	261
	%	22.3	7.6	2.4	32.3	8.4	27.1	100.0
중학교 졸업	명	117	61	23	165	30	210	606
	%	19.3	10.1	3.8	27.2	5.0	34.7	100.0
고등학교 졸업	명	1,338	545	174	1,738	393	2,881	7,069
	%	18.9	7.7	2.5	24.6	5.6	40.8	100.0
전문대학 졸업	명	290	72	36	282	63	532	1,275
	%	22.7	5.6	2.8	22.1	4.9	41.7	100.0
대학교 졸업	명	640	271	191	1,281	244	2,191	4,818
	%	13.3	5.6	4.0	26.6	5.1	45.5	100.0
석사학위자	명	83	35	21	150	25	278	592
	%	14.0	5.9	3.5	25.3	4.2	47.0	100.0
박사학위자	명	28	14	20	59	15	110	246
	%	11.4	5.7	8.1	24.0	6.1	44.7	100.0
전체	명	2,552	1,017	471	3,756	791	6,270	14,857
	%	17.2	6.8	3.2	25.3	5.3	42.2	100.0

<학부모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구 분		방과 후 학교	2008년 대입전형	본고사 금지	EBS	수준별 이동수업	효과적인 정책없음	전 체
~ 100만원	명	189	54	29	224	52	291	839
	%	22.5	6.4	3.5	26.7	6.2	34.7	100.0
101~200만원	명	605	244	85	716	167	1,125	2,942
	%	20.6	8.3	2.9	24.3	5.7	38.2	100.0
201~300만원	명	726	273	128	993	197	1,731	4,048
	%	17.9	6.7	3.2	24.5	4.9	42.8	100.0
301~400만원	명	338	138	48	500	124	980	2,128
	%	15.9	6.5	2.3	23.5	5.8	46.1	100.0
401~500만원	명	237	87	46	410	70	780	1,630
	%	14.5	5.3	2.8	25.2	4.3	47.9	100.0
501~600만원	명	44	18	11	87	17	210	387
	%	11.4	4.7	2.8	22.5	4.4	54.3	100.0
601~700만원	명	22	9	7	49	7	101	195
	%	11.3	4.6	3.6	25.1	3.6	51.8	100.0
701~800만원	명	15	8	11	31	10	65	140
	%	10.7	5.7	7.9	22.1	7.1	46.4	100.0
801~900만원	명	2	2	0	6	0	18	28
	%	7.1	7.1	0.0	21.4	0.0	64.3	100.0

901~1,000만원	명	30	19	9	57	9	86	210
	%	14.3	9.0	4.3	27.1	4.3	41.0	100.0
1,001만원 ~	명	33	14	15	41	7	70	180
	%	18.3	7.8	8.3	22.8	3.9	38.9	100.0
1,001만원 ~	명	2,241	866	389	3,114	660	5,457	12,727
	%	17.6	6.8	3.1	24.5	5.2	42.9	100.0

4. 노무현 정권은 지역 · 학교간 학력격차를 심화시켰다

1) 학력격차가 세습되고 있다

① 교육격차가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시킨다

○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로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가정의 경제력 격차가 그대로 자녀들의 학력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 경제가 점차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환경의 차이로 인해 교육 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절대빈곤의 원인임과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시킬 위험이 큼

○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진데서 비롯된 계층 간의 불신은 사회통합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 개인 여건에서 비롯된 학력격차를 방치할 경우, 계층 고착화로 인해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 확보가 크게 저해될 위험

② 부모소득에 따른 학력격차 세습화 :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좋으며,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 참여비율이 높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04.4~8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게 표집된 중3 학생 2,000명, 실업계 고3 학생, 일반계 고3학생 각 2,000명 등 총 6,000명과 이들의 부모, 담임선생, 학교행정가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중학생의 경우 3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비율은 성적 상위권이 중위권 보다 13.1%, 하위권보다 17.6%가 높으며,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석**

〈소득 높을수록 학력 높아〉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	성적 (중학교)			전 체
	상	중	하	
100만원 미만	23 4.5%	55 8.2%	63 14.3%	141 8.7%
100~200만원 미만	108 21.1%	192 28.6%	144 32.7%	444 27.3%
200~300만원 미만	155 30.3%	216 32.2%	117 26.5%	488 30.0%
300~500만원 미만	164 32.0%	153 22.8%	91 20.6%	408 25.1%
500만원 이상	62 12.1%	55 8.2%	26 5.9%	143 8.8%
전 체	512 100.0%	671 100.0%	441 100.0%	1,624 100.0%

○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더 받고 있으며,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이 높음

☞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유사**

- 중학생의 경우 '03.9~ '04년 동안 국어과목에 대해 사교육을 받은 비율은 성적 상위권이 60.6%로, 중위권과 하위권 보다 각각 13.0%, 24.7% 높음
- 수학과목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성적 상위권이 80.6%로 중위권과 하위권 보다 각각 13.6%, 31.5% 높은 것으로 확인
- 영어과목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성적 상위권이 80.8%로 중위권과 하위권 보다 각각 15.8%, 31.9% 높았음

○ 가정환경에 따라 대학 진학률도 큰 차이

- 가정 배경에 따라 자녀의 대학 진학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사
- 대학 미진학률은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40%를 넘음(초등졸 45.9%, 중졸39.9%)
- 그러나, 부모의 학력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인 경우는 12%, 대학원 이상인 경우 10.3%로 전자의 4분의 1 수준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부모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각각 3~4%선에 그치나 부모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 28%, 대학원 이상인 경우 41.4%로서 7~10배 정도 차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4년제 대학 진학률 높아>

(단위 : 명,%)

부모 학력	대학 진학				계
	미진학	전문대학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7(45.9)**	87(34.1)	42(16.5)	9(3.5)	255(100.0)
중학교 졸업	**145(39.9)**	122(33.6)	79(21.8)	14(4.7)	363(100.0)
고등학교 졸업	116(21.9)	173(32.6)	**175(33.0)**	66(12.5)	530(100.0)
2년제 전문대학 졸업	6(16.7)	10(27.8)	**14(38.9)**	6(16.7)	36(100.0)
4년제 일반대학 졸업	18(12.0)	24(16.0)	**66(44.0)**	42(28.0)	150(100.0)
대학원 졸업 이상	3(10.3)	3(10.3)	11(37.9)	**12(41.4)**	29(100.0)
계	405(29.7)	419(30.7)	387(28.4)	152(11.2)	1,363(100.0)

– 자료: 강영혜,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KDI)

○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도 큰차이

– 부모가 고위 임직원 · 전문직인 경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 33%, 그러나, 농 ·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 근로자,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7.3%, 6.6%, 8.6%에 불과

– 미진학률은 부모가 고위 임직원 · 전문직인 경우 9.4%이나, 서비스 · 판매 근로자, 농 ·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 근로자, 단순 노무직은 각각 30~40%에 달함

<부모가 고위 임직원 · 전문직일수록 대학진학율 높음>

(단위 : 명,%)

부모 직업	대학 진학				계
	미진학	전문대학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전문가	10(9.4)	14(13.2)	**47(44.3)**	**35(33.0)**	106(100.0)
준전문가/사무직	31(18.7)	45(27.1)	60(36.1)	30(18.1)	166(100.0)
서비스 · 판매근로자	67(30.2)	66(29.7)	66(29.7)	23(10.4)	222(100.0)
농 · 어업 숙련 근로자	38(34.9)	39(35.8)	24(22.0)	8(7.3)	109(100.0)
기능근로자/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31(30.0)	149(34.1)	128(29.3)	29(6.6)	437(100.0)
단순노무직 근로자/기타	68(42.0)	52(32.1)	28(17.3)	14(8.6)	162(100.0)
계	345(28.7)	365(30.4)	353(29.4)	139(11.6)	1,202(100.0)

– 자료: 강영혜,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KDI)

○ 부모의 소득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이 제일 높음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월평균 246만원
- 미진학 131만원, 전문대 146만원, 지방 4년제 대학 189만원

〈대학 진학 집단별 가구주 월평균 소득의 차이〉

대학진학유형	사례 수	부모 월평균 소득	표준편차
미진학	345	131.16	106.21
전문대학 진학	369	146.22	115.52
지방 소재 4년재 대학 진학	352	189.67	131.25
서울 소재 4년재 대학 진학	139	246.75	234.06
전 체	1,205	166.20	141.38

- 자료: 강영혜,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KDI)

○ 교육기회의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의 대학취학률의 차이는 작으나 명문대 진학률에서 큰 격차 발생

- 서울대 사회과학원(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1985년에는 1.3배에 불과하였으나, 15년 사이 무려 16.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실업계 고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음

- 부모가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집단의 52.1%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47.9%가 일반계(특목고 포함) 고등학교에 진학
- 반면, 부모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에는 6.9%만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93.1%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

○ 부모의 직업에 따라 인문계 고교진학율도 차이

-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와 준전문가 및 사무직인 경우 실업계 고교 진학률은 20% 미만
- 그러나, 나머지 직업 집단의 경우 실업계 고교 진학률이 30~40%에 이름

☞ **특히 부모의 직업이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인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비율이 43.7%로 다른 직업 집단에 비해 훨씬 높음**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인문계 진학율 높음〉

(단위 : 명,%)

부모 학력	고등학교 유형		계
	실업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 이후	818(52.1)	751(47.9)	1,569(100.0)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1,614(34.5)	3,061(65.5)	4,675(100.0)
2년제 대학 중퇴 및 졸업	109(19.3)	455(80.7)	564(100.0)
4년제 대학 중퇴 및 졸업	255(13.8)	1,593(86.2)	1,848(100.0)
대학원 수료 및 학위 취득 이상	41(6.9)	553(93.1)	594(100.0)
계	2,837(30.7)	6,413(69.3)	9,250(100.0)

– 자료: 강영혜,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KDI)

〈부모의 직업에 따른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비율의 차이〉

(단위 : 명,%)

부모 학력	고등학교 유형		계
	실업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전문가	355(17.2)	1,712(82.8)	2,067(100.0)
기술공 및 준전문가/사무직	211(19.5)	873(80.5)	1,084(100.0)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391(30.9)	874(69.1)	1,265(100.0)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422(43.7)	543(56.3)	965(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 ·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624(32.7)	1,313(67.8)	1,937(100.0)
단순노무직 근로자 / 기타	433(39.4)	666(60.6)	1,099(100.0)
계	2,436(28.9)	5,981(71.1)	8,417(100.0)

– 자료: 강영혜,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KDI)

③ 가정내 문화 환경 차이에 따른 학력격차도 두드러짐

○ 가정내 문화 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성적이 높음

– 가정의 책 보유 권수가 많거나 가족간에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이나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를 관람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성적 높음

– 중학생의 경우 가정에 책을 많이 보유한 학생일수록 성적 높음

☞**성적 상위권 24.4%, 중위권 12.5%, 하위권 6.8%가 300권 이상의 책 보유**

– 가족간에 영화나 연극, 뮤지컬,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와 같은 문화적 환경에 노출이 많을수록 성적 우수

☞**성적 상위권의 38.5%, 중위권의 51.0%, 하위권의 58.6%가 가족 간에 영화나 연극, 뮤지컬을 전혀 관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성적 상위권의 51.4%, 중위권의 64.6%, 하위권의 73.3%가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를 전혀 관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중학생에서 확인되는 문화생활과 성적간의 상관관계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남

〈가정에 책이 많을수록 성적 높음(중학교)〉

가정 내 책 보유권수	성 적			전 체
	상	중	하	
100권 미만	182 35.2%	313 46.0%	262 59.1%	757 46.1%
100~300권 미만	209 40.4%	283 41.6%	151 34.1%	643 39.2%
300권 이상	126 24.4%	85 12.5%	30 6.8%	241 14.7%
전 체	517 100.0%	681 100.0%	443 100.0%	1,641 100.0%

○ 부모의 문화자본의 보유량은 수능성적의 위계와도 일치

– 수능성적과 문화자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경험의 차이는 대학 진학과도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2) 지역간 학력격차를 심화시켰다

① 지역 간 학력격차 심화

○ 전국 16개 지역간 초등학생의 학력격차가 4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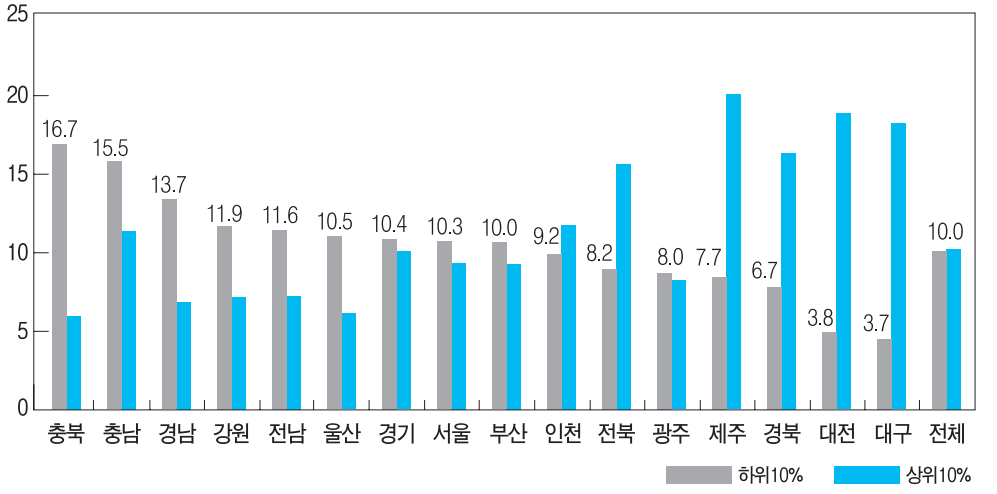
–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10분위로 나누어 하위그룹(하위10%)과 상위그룹(상위10%)에 속한 학생들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충북은 100명중 16.7명이 하위그룹에 속하는 반면, 대구는 100명 중 3.7명 밖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역별로 4.5배 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상위그룹의 경우 울산 5.4명, 충북 5.8명에 그친데 반해 제주는 울산보다 무려 4배나 많은 20.9명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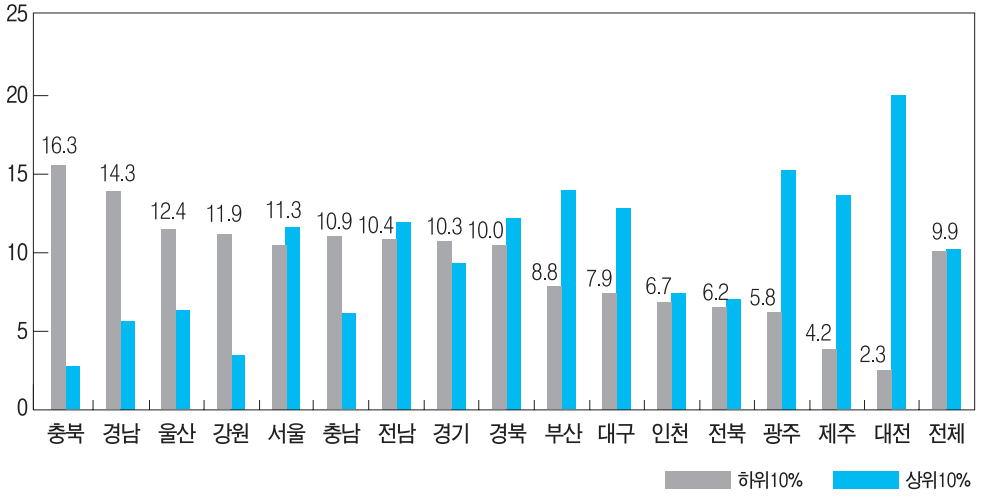
○ 전국 16개 지역간 중학생의 학력격차가 6배 이상

-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10분위로 나누어 하위그룹(하위10%)과 상위그룹(상위10%)에 속한 학생들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충북은 100명중 15.3명이 하위그룹에 속하는 반면, 대전는 100명 중 2.3명 밖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역별로 초등학교의 학력격차보다 큰 6배 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상위그룹의 경우 대전은 100명중 19.5명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높고, 광주, 부산, 제주, 서울, 경북, 전남 지역이 100명중 10명 이상이 상위 10%에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시도별 하위10% 학생비율과 상위10% 학생비율(초등학교 6학년)>



<시도별 하위10% 학생비율과 상위10% 학생비율(중학교 3학년)>



〈시도별 하위10% 학생비율 및 상위10% 학생비율〉

초등(6학년)			중등(3학년)		
지 역	하위10%	상위10%	지 역	하위10%	상위10%
충북	16.7	5.8	충북	15.3	2.5
충남	15.5	11.6	경남	14.3	5.6
경남	13.7	6.6	울산	12.4	6.9
강원	11.9	7.3	강원	11.9	3.6
전남	11.6	7.3	서울	11.3	12.4
울산	10.5	5.4	충남	10.9	6.3
경기	10.4	9.6	전남	10.4	11.2
서울	10.3	8.7	경기	10.3	8.6
부산	10.0	8.5	경북	10.0	11.3
인천	9.2	11.2	부산	8.8	13.9
전북	8.2	15.0	대구	7.9	12.0
광주	8.0	7.6	인천	6.7	7.3
제주	7.7	20.9	전북	6.2	6.6
경북	6.7	15.4	광주	5.8	14.8
대전	3.8	18.1	제주	4.2	12.7
대구	3.7	17.2	대전	2.3	19.5
전체	10.0	10.2	전체	9.9	10.0

○ 지역에 따른 공교육 여건과 교육기회의 차이

– 농어촌의 학교 중 소규모 학교(학급 수 6개 미만,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는 전체 학교의 1/5 수준

– 특히 소규모 학교 중에서도 한 학년당 한 개 학급 운영이 어려워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대부분이 농어촌에 분포되어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시내 지역에 몰려 있어, 읍 · 면 지역의 고등학교는 부족

☞ **도 · 농 통합시인 제천시의 경우 총 7개의 고등학교가 시내 지역과 시내 인근 지역에 몰려 있고, 읍 · 면 지역에는 고등학교(실업계고등학교 포함)가 없음**

☞ **특기적성교육의 자비 부담률이 높고, 학생 수송 등의 이유로 학생 참여율이 낮아 방과 후 활동에도 제한이 많음.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전문교사 초빙시 시내 지역과 동일한 비용이 책정되므로 유능한 강사 초빙 난처**

☞ **농어촌 방과 후 교실 운영 학교비율: 71.6%, 참가 학생비율: 35.7%**

〈지역별 전체 학교 중 소규모 학교 비율〉

학교구분	농 어촌	도 시
초등학교	13.0%	0.7%
중학교	41.7%	0.7%
고등학교	12.9%	0.0%
전 체	20.8%	0.6%

– 자료: 교육통계연보,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제안 (KDI)

○ 도시지역보다 높은 교육비 부담

–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해당 읍 · 면 지역이 아닌 인근 도시지역 또는 대도시로 유학을 감에 따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학생 1인당 교육비 도 · 농 간 비교〉

(단위 : 천원)

교육비 구분	도 시	농 촌	비 고
전체 교육비	3,701	4,366	도시보다 농촌이 666천원 더 부담
학교 교육비	1,628	3,131	도시보다 농촌이 1,503천원 더 부담
사교육비	2,073	1,235	농촌이 도시보다 838천원 적음

– 자료: 농림부, 농촌교육 여건과 개선 과제, 2002

○ 지역에 따라 사교육 접근기회도 크게 차이

– 학생 1,000명당 입시 · 보충학원 수는 전국 평균 2.7개

☞ **서울은 3.3개, 특히 8학군 지역(강남 · 서초 · 송파)은 5.2개로 전국 평균의 2배**

〈지역별 초 · 중 · 고교생 천명당 입시 · 보충학원 수〉

구 분	서 울			광역시	기타 시 · 도	전체평균
	8학군(강남 · 서초 · 송파)	기 타	평 균			
학원 수(개)	5.2	2.8	3.3	2.5	2.7	2.7

– 자료: 국회 발표자료,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

○ 지역에 따른 대학진학 유형도 크게 차이

–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간 전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만 보면 큰 차이가 없음

– 그러나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진학비율은 지역 간에 큰 차이

☞ **농산어촌지역 고교 졸업자는 도시지역에 비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낮고,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더 높음**

☞ **고교 졸업생 만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는 전국 평균이 10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데 비해 서울은 약 15명,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25명**

○ 고교 진학 유형의 차이

– 실업계 고교 진학률이 서울 · 광역시 등 시 지역에 비해 읍 · 면 지역이 훨씬 높아 도 · 농 간 학생들의 대학진학기회 차이 발생

② 도시의 지역간 격차

○ 대도시 내에도 지역에 따른 학력격차 뚜렷

–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대도시의 특정지역에 직업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 밀집 지역 형성

– 이들 지역의 학생은 경제적 빈곤과 이로 인한 학부모의 보호 및 지원 부족으로 학습 준비도와 학습 의욕 저하 및 성적 부진의 악순환 발생

– 서울시 교육청(2002. 11)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일부 저소득 지역 초등학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은 3.6%에서 4.5% 사이임

☞ **이는 전국 평균 비율 1.1%의 3.5배에서 4.5배에 해당**

○ 교육경비 보조금 제도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적 차이 확연

– 2001년 교육경비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편성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45억에서 시작해, 2002년 152억, 2003년 178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

– 2003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을 편성한 자치구는 강남구 47억, 중구 27억, 양천구 11억, 노원구 10억, 마포구 10억 등

– 반면 성북구 1억5천, 금천구 5천2백만 원으로 지역 차이가 두드러져, 교육경비 지원 불균형에 따른 지역주민간 위화감 조성

○ 서울의 경우, 지역내 상대적 학력격차가 더욱 심각

– 서울지역 초등학생 성적을 구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강동구의 22.5%가 하위 그룹에 속하는 반면, 강남은 1.4%에 그쳐 두 지역간 약 16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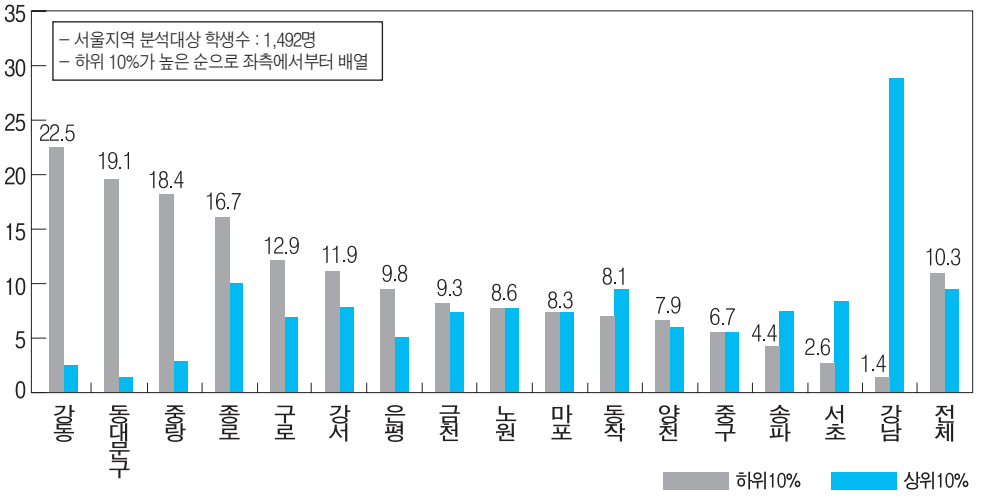
– 상위 그룹의 경우 강남이 32.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동대문은 1.5%에 그쳐 약 22배의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지역 중학교 학생 성적을 구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마포구 및 구로구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하위10% 학생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며, 강서, 송파, 강남구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비율이 5% 미만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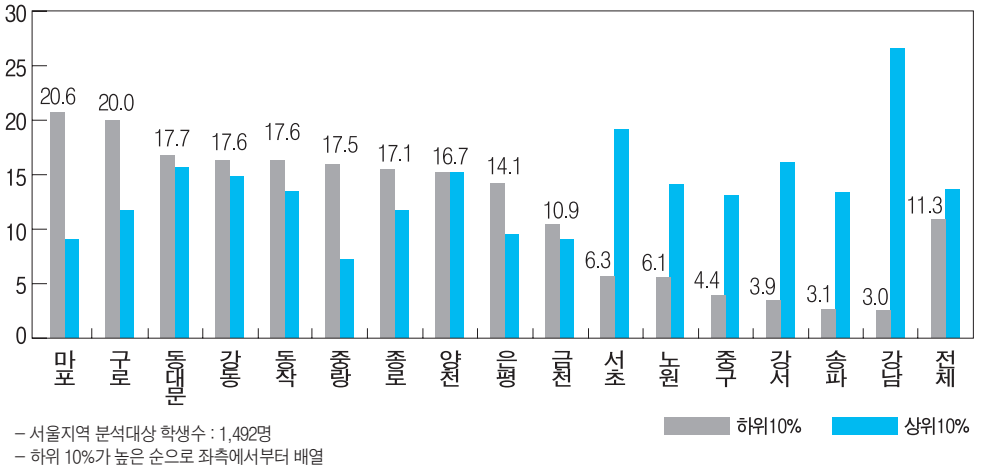
– 강남구가 상위10%에 속하는 학생비율이 2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초구가 19.1%, 양천구 및 동대문구가 16%로 상위10%에 속하는 학생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강동구 및 중랑구 등은 하위 10%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상위10%에 속하는 학생비율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지역간 학력격차 뿐만 아니라 학교간 학력 격차의 문제도 심각함을 알 수 있음

〈서울시 구청별 하위10% 학생비율과 상위10% 학생비율(초등학교 6학년)〉



〈서울시 구청별 하위10% 학생비율과 상위10% 학생비율(중학교 3학년)〉



– 서울지역 분석대상 학생수 : 1,492명
– 하위 10%가 높은 순으로 좌측에서부터 배열

〈서울시 구청별 하위10% 학생비율 및 상위10% 학생비율〉

초 등			중 학		
지 역	하위10%	상위10%	지 역	하위10%	상위10%
강동	22.5	2.9	마포	20.6	8.8
동대문구	19.1	1.5	구로	20.0	11.4
중랑	18.4	2.6	동대문	17.7	16.1
종로	16.7	10.0	강동	17.6	2.9
구로	12.9	6.4	동작	17.6	14.7
강서	11.9	7.3	중랑	17.5	6.3
은평	9.8	4.9	종로	17.1	11.4
금천	9.3	8.0	양천	16.7	16.7
노원	8.6	8.6	은평	14.1	8.1
마포	8.3	8.3	금천	10.9	7.8
동작	8.1	10.8	서초	6.3	19.0
양천	7.9	7.0	노원	6.1	13.1
중구	6.7	6.7	중구	4.4	11.8
송파	4.4	8.8	강서	3.9	15.6
서초	2.6	5.3	송파	3.1	12.5
강남	1.4	32.9	강남	3.0	27.3
전 체	10.3	8.7	전체	11.3	12.4

–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료가 모두 있는 구청들로 구성함

③ 농어촌 교육여건 악화

○ 인구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로 교육여건 하락

– 농어촌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농어촌 학생수는 1999년 145만명에서 2003년 124만명으로 5년간 14.5% 감소

– 농어촌 전체 5,194교 중 소규모 학교는 2,246교로 43.2%를 차지

– 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수업부실, 학력저하,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 부실로 이어지기 쉬움

– 게다가 통학 거리나 문화적인 환경까지 고려하면 대도시의 교육여건과 도저히 견줄 수 없어, 농어촌지역 학생의 전반적인 학력저하 발생

〈고등학교 2학년 학력 미달 학생 수〉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도 시	읍면
응시 학생 수		3,972	3,204	768
미달 학생 수	국어	517(13.0)	321(10.0)	195(25.4)
	영어	107(2.7)	58(1.8)	49(6.4)
	수학	136(3.4)	73(2.3)	63(8.2)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

〈시도별 초등학생 기초학력 부진학생 현황(2003)〉

(단위 : 명, %)

지 역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총학생수	부진학생수	비 율	총학생수	부진학생수	비 율
서울	127,650	4,810	3.8	128,841	2,337	1.8
부산	49,591	2,434	4.9	48,973	1,527	3.1
대구	39,019	1,706	4.4	38,600	1,511	3.9
인천	38,265	1,061	2.8	37,626	455	1.2
광주	23,756	384	1.6	23,064	159	0.7
대전	22,621	908	4.0	22,310	514	2.3
울산	18,161	890	4.9	19,037	618	3.2
경기	166,535	3,276	2.0	160,694	1,982	1.2
강원	17,559	1,702	9.7	17,102	693	4.1
충북	21,806	742	3.4	20,978	448	2.1
충남	26,797	526	2.0	25,595	275	1.1
전북	26,915	289	1.1	25,743	205	0.8
전남	27,888	1,233	4.4	26,284	755	2.9
경북	36,693	1,754	4.8	36,851	1,018	2.8
경남	47,524	917	1.9	46,650	634	1.4
제주	8,701	366	4.2	8,319	164	2.0
평 균			3.7			2.2

– 자료: 이주호(2004). 200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 학교 간 학력격차를 심화시켰다

① 고교별 학력격차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학력평가(PISA 2003) 종합 2위의 실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관하에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한국은 2000년과 2003년 모두 종합2위의 성적을 기록

- 정부에 의해 대대적으로 호도된 이 결과는, 그러나 평가표집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었음
- 즉, 2000년도 평가 때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소재 특목고 2개교와 자립형사립고 1개교 등 학교선택권이 허용되는 학교들이 2003년에는 포함되었음
- 그러므로 PISA 2003 결과를 평준화 정책의 공으로 돌리는 해석은 크게 잘못된 것. 또한 PISA가 우리나라 고1의 1% 정도를 표집 하여 행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통해 전체 교육정책이 잘되었다고 자축하는 것은 매우 위험

○ PISA 2000의 읽기성적의 경우 최상위권 학교와 최하위권 학교간의 평균점수차가 200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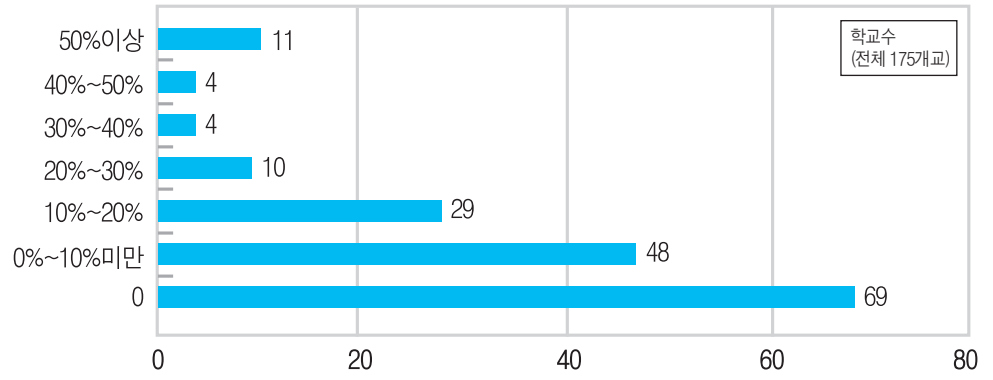
- PISA 2000년도의 읽기성적을 전국의 고등학교별 평균점수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150개 학교 중에서 최상위권 학교와 최하위권 학교간의 평균점수차가 무려 200점 이상
- 이를 다시 인문계 학교만을 비교해 볼 경우에도 150점의 격차
- 이는 전국의 고등학교별로 실로 엄청난 학력격차가 있음을 보여줌

☞ **이는 2001년도 치러진 전국규모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도 동일, 조사대상 175개 고등학교 중 최상위 10%에 속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체 대상학교 중에서 무려 39.4%에 달함**

○ 조사된 175개 고등학교 중 최상위집단 10%에 속한 학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69개교(39.4%)로 가장 많았으며, 10%미만인 학교가 48개교(27.4%), 10%이상 20%미만인 학교가 29개교(16.6%)로 뒤를 잇고 있음. 반면 전체 학생의 절반이상이 상위 10%에 속한 학교도 11개교(6.3%)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그룹에 속한 학생이 한명의 학생도 없는 학교의 대부분은 실업계 고교(44개교)와 중소도시 및 읍면단위 소재 비평준화고(23교)였으며, 학생 절반 이상이 상위그룹에 속한 학교에는 특목고(7개교)와 비평준화 일반계고(3개교)가 포함되어 있음
- 이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2,031개교(2003년 기준)간의 심각한 학교별 학력격차를 말해 주고 있음

〈최상위10% 소속 학생비율에 따른 학교분포 : 전체(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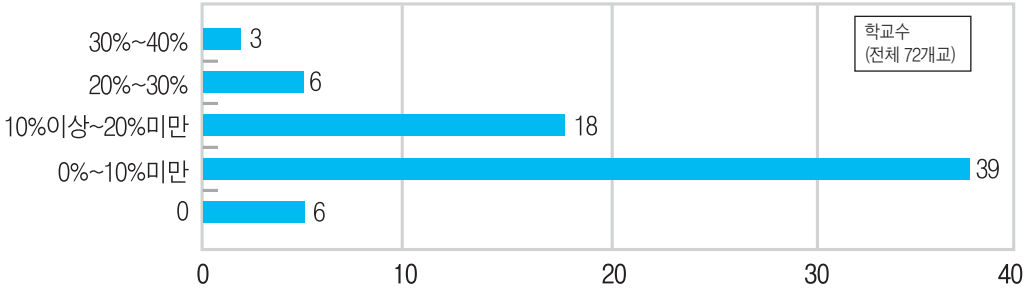
– 일반계, 특목고, 실업계 포함

② 고교간 학력격차는 평준화 고교간에도 매우 크게 나타남

○ 특목고와 실업계 고교 및 일반계 비평준화 고교를 제외한 평준화 고교만을 놓고 학교의 상위그룹 학생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학교간 격차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0%~10% 미만인 학교가 39개교(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20% 사이인 학교가 18개교(25.0%)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최상위집단에 한 명의 학생도 없는 학교가 6개교(8.7%), 전체학생의 30%이상의 학생이 전국 상위 10%에 속하는 학교가 3개교(4.3%) 존재하는 등 평준화 지역내에서도 학교간 격차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상위10% 학생비율에 따른 학교분포 : 일반계 평준화고(고2)〉



– 일반계 비평준화고, 특목고, 실업계 제외

노무현 정권의 '사학파괴법'

II

노무현 정권의 '사학파괴법'

노무현 정권
교육정책 실패

1. 정부의 개정사학법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전교조의 좌파이념으로 바꾸려는 법이다

●●●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왜 순교를 각오한 단식 삭발농성에 들어갔는가 ?



- 정부 개정사학법은 소수 비리사학을 빌미로 전체 사학을 말살하려는 법이다
- 사학의 건학이념을 강제로 배제하려는 개정사학법은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

- 중고등학교의 30% 이상, 대학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들이 모두 이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 올 하반기에 정부는 사학에 대하여 대대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온갖 협박을 했지만 반발은 막기 힘들다
- 사학의 이사회를 강제적 개방이사나 정부 코드에 맞추어 파견된 임시이사가 점령할 경우 집단적 사학폐교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 사학법과 열린우리당 정체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정체성을 들고 운운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에 사로잡혀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 해임사건으로 사학의 혼란상 : 대학 이사회에 학내 구성원에 의하여 투입된 이사 한 명의 아집과 독선이 대학 전체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고 급기야 신망 높은 대학총장을 해임

2. 사학비리는 척결하되 진정한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사학법을 再개정하자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사학의 자율성을 찾아 주자는 것임

●●● 날치기 사학법안의 문제점

1) 지나친 사학규제, 선진국에서는 유래가 없다

○ 일본을 제외하고 별도의 사립학교법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 거의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사립학교에 대하여 강하게 규제

☞ 일본조차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을 뿐, 관선이사조차 파견된 사례가 없음

2) 사학의 본질적 자율인 사립학교 경영권 침해는 위헌이다

①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학(비리사학 뿐 아니라 건전사학을 포함)에 경영권의 가장

본질인 이사의 일정비율(1/4)을 개방형 이사로 강제하는 법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 임시이사가 파견된 비리사학은 전체사학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 비리사학은 입학정원 500~2,000명 이하의 소규모 사학임

☞ **사외이사를 강제하는 증권거래법에서도 강제대상이 '자산규모 2조이상의 기업'으로 모든 회사에 강제하지 않음**

② 법 개정안 본래 취지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장치 역할은 이사가 아닌 감사임

☞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소한의 감시 · 견제장치라는 주장은 결코 맞지 않음**

③ 교장의 임기제한(4년 중임만 허용)은 사립학교 경영의 본질적인 부분인 인사권 침해임

○ 인사권은 경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본질적 부분이며, 특히 '학교의 장'의 역할은 사학이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학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위임한 중차대한 경영권

○ 학교장을 국공립에 맞춰 임기 제한하는 조치는 합리적 이유없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매우 큼

☞ **국공립학교조차도 초빙 교장의 경우, 학교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기에 구애받음 없이 책임경영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3) 국가재정 지원을 이유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요구함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① 우리나라 전체대학의 85% 이상, 4년제 대학의 75% 이상이 사립대학인 현실에서, 국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율은 사립대학 운영수입의 4% 정도밖에 되지 않음

② 사학 재정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이유로 한다 할지라도 이를 반영한다면 대학평의회(등록금을 내는 학생 · 학부모가 아닌, 주로 교수로 구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음

③ 또한, 초중등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의 교육투자 부족으로 사학에 의무교육을 의존하였던 역사적 배경과 사학의 학생선택권을 박탈한 평준화 조치에 상응하는 이유 있는 비용임

※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사립학교에 대해 '재산권' 주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가 사법적 영역임을 인정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주장

※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과 국·공립대학교의 교원의 차별 취급은 사법적 관계와 공법상 권력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학교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 ('98년 헌재 판례)

4) '공공복리'를 이유로 사학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부적절하다

① 우선, 헌법 제37조에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시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는 기본권 본질 제한 불가조항이 함께 있음

②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한다면, 그 전제는 사립학교 설립 자체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여야 함

☞ **그러나, 사학 설립은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학이 사적재산을 출자하면서 행하는 오히려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행위임**

5) 날치기 사학법으로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만 높였다

① 열린우리당은 날치기 사학법을 통해 법으로 금지하던 학생 등록금 전용의 길을 만들어 놓았음

② 즉, 학생 등록금을 사용해서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있도록 함

☞ **갈수록 무거워지는 등록금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선이사들 먼저 챙기려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

6) 독소조항은 제거되어야 한다

① 개정사학법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였음

☞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설립자 및 그 가족의 건학이념 실현과 이를 통한 행복추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② 개정사학법은 학교장의 임기를 4년에 1회 중임으로 제한하였음

☞ **사립학교 교직특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공립학교에 꿰어맞춘 것으로 교장을 역임한 뒤 일반 평교사로 돌아갔을 때 겪게 되는 심적 부담 등 근무환경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③ 임시이사는 관선이사와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사실상 관치의 수단이 되었고 그 폐단이 큼 → 특히, 여권의 선거 낙마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리 만들기로 악용

☞ 그동안 임시이사 선임을 교육부 장관이 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날치기 사학법은 오히려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늘려 임시이사 파견을 쉽게 해놓았음(임시이사 선임주체를 교육부 장관 → 관할청으로 변경)

④ 개정사학법은 사립대학에 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했고, 시행령에서는 평의회가 대학의 헌장(건학이념 포함)을 심의해서 바꿀 수 있음 → 학교현장에서 대학평의원회와 이사회 간 마찰만 조장

☞ 본래 사학은 자율의지에 따라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며, 건학이념은 곧 사학의 존재이유이고 학교경영의 철학임

〈건학이념을 바꿀 수 있는 평의원회〉

법령명	관련조항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①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본조신설 2006.6.23)	제10조의7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 (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 · 연구용 시설 · 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 ·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3. 노무현 대통령은 날치기 사학법을 즉각 재개정하라

1) 개정사학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법

①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조차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권상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날치기 처리 법안

- ○ '05.12.9 김원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미리 열린우리당 15명을 본회의장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문으로 본회의장에 입장시켜 국회의장석과 그 주변을 미리 선점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
- ○ 본회의 의사일정에서 다섯 번째로 예정된 사립학교법을 야당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첫 번째로 상정 후, 제안설명(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예정)도 없이 투표실시

②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2차례에 걸쳐 한나라당의 사학법 再개정 요구를 받아 줄 것을 열린우리당에 요청

- ○ '06.4.29 노무현 대통령 주재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사학법 再개정에 대한 여당의 대승적 양보권유
- ○ '06.8.23 당정청 4인 고위급 간담회에서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법 · 국방개혁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사학법 再개정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

③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사학법의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사학법을 再개정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여당내에서 재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 안영근 · 유재건 · 오제세 의원**

2)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거부하는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再개정안 수정내용

① 우선, 제안이유를 보면 '사학 운영의 투명성 ·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수도 없이 호소한 말이었고, 이는 결국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과격하게 침해하는 방법을 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말**

② 다음으로, '현행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으로 명시

☞ 어떻게 사립 유치원장이 8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일부 미비점입니까?

③ 사립학교장의 4년 중임제한과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불가 조항에 대한 수정 내용 역시도 일부 미비점으로 표현

☞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정말 중대한 문제임

④ 헌법학자들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강제적 개방형 이사'와 '임시이사' 조항에 대한 수정내용은 없음

: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보여줬던 상징적인 법안인데 이것마저 흔들리면 당의 입지를 세울 수 없다는 여당내 주장

☞ 정파적 이념이 헌법보다 중요한가?

4. 국민 모두는 날치기 사학법 재개정을 원한다

1) 여론조사 결과 '사학의 자율권 침해등 개정사학법이 문제가 많으므로 再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5% (문화일보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06.8.29)

사학법 재개정 찬성	사학법 재개정 반대	열린우리당 지지층
63.5%	20.5%	■ 재개정 필요 : 57.8% ■ 필요하지 않다 : 33.8%

2) 개방형 이사제는 그 취지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뿐만 아니라 제3의 기구에서도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확대 개방하자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전국 성인남녀 3,297명을 대상 전화여론조사, 여의도연구소 '06.12.5〉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만 부여 (열린우리당)	제3의 기관에도 추천권한 부여 (한나라당)	잘 모르겠다	열린우리당 지지층
29.6%	45.1%	25.2%	■ 개정사학법 제도 : 32.6% ■ 개방형 이사 추천권한 확대 개방 : 48.1%

3) 열린우리당 의원도 인정하는 하자 있는 날치기 개정사학법

① 개정사학법은 설립자가 직접 원장으로서 운영하는 소규모 사립 유치원도 8년 후에는 설립자가 유치원장을 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원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던지 문을 닫든지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u>열린우리당에서 재개정을 가장 반대하는 분(정봉주 의원)도 이 부분은 미처 몰랐다며 보완 필요성 인정</u>

② 개정사학법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날치기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했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 많은 법안임

5. 한나라당 재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핵심사항	한나라당 주장	재개정안 요지
자율형 사립학교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 근거 마련	•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 가능 : 건학이념 분명,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재정 독립 ,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 자율형 사립학교 자율성 보장 : 학생선발권, 수업연한 및 학급편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료 등 납부금, 교직원 보수 •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권한 시 · 도 교육감에 부여, 세부사항은 시 · 도 조례로 규정
사학의 투명성 강화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기능 강화방안 제시	• 학교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감사' 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내실있는 감사실시를 위해 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감사중 1인은 초 · 중등학교는 회계 또는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자, 대학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 • 예산, 결산 등의 회계보고 및 감사증명서를 인터넷에 공개
개방형 이사 추천권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특정 기구가 독점하는 폐쇄성을 극복 ☞ 국민은 한나라당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남	• 학교법인은 자율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총동창회와 종단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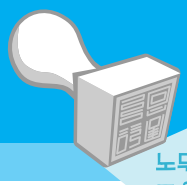
임시이사 선임	선임주체 변경 (관할청 → 법원)	•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청구가 있을 경우 –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학교의 비리가 중대한 경우, 감사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전교조를 통한 편향된 교육을 방치했다

III

전교조를 통한 편향된 교육을 방치했다



노무현 정권
교육정책 실패

1. 좌파 전교조의 편향된 교육실태

1) 좌파 전교조 교육받은 학생, "북한 핵무기에 자긍심 느꼈다"

① 잘못된 안보교육으로 국가관 왜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펴낸 책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 실린 한 초등학생의 글

☞ '통일이 되면 북한에는 핵무기가 많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좋아지고, 땅이 넓어져서 우리나라를 얕보는 일이 없게 되어 더욱 발전할 것이다'

○ 이는 2000년 전교조 소속의 한 교사로부터 통일교육을 받은 뒤 제출한 것임

○ 당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 전교조 소속 교사로부터 통일수업을 받은 학생은 마치 북한의 핵보유가 우리의 자긍심으로 이어진다는 식의 반응을 보임

○ 지난 10월 북한이 핵실험 직후 내보낸 "핵무기 보유로 우리도 강대국이 됐다" "민족의 자긍심을 높인 경사스러운 날" 등의 글과 매우 유사

② 좌파 전교조는 학교를 좌편향 이념교육의 도구로 이용한다

○ 해당 초등학생의 담당 교사는 매주 월요일 한 시간씩 '통일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잘못된 안보의식을 심어줌

○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이 현실

○ 실제로 부천의 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고교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가 학부모 140명이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지난 6월에 알려진바 있음

☞ 전교조 부천시 중등지회장 출신인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군대에서 살인기술과 복종의 문화만 배우기 때문에 되도록 안 가는 게 좋다"고 가르침

2)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① 전교조의 '통일 교과서'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 전교조는 2001년 그들의 '통일 교과서'에 해당하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제작,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전파

☞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 등 우파세력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나서 분단 단독정부로 나아가게 됐다'**

○ 이는 남한 쪽에 분단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며, 아울러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

② 親北 · 反美 이념을 가르쳤다

○ 전교조는 또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 교재를 통해 反美 · 親北적 이념을 아이들에게 강요함

☞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내주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군사 주권을 남에게 50년 이상 넘겨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봐야 된다'**

○ 지난 7월에는 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 원전을 그대로 베낀 '통일교재'를 사용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어남

☞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5년 10월 18일~11월 1일까지 3차례 통일학교를 개설하면서, 김정일의 '선군(先君)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력사'를 발췌한 교재를 만들어 사용**



▶ 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 역사책 원전을 그대로 베낀 '통일교재' : 김정일의 '선군(先君)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지난 9월 경찰의 전교조 부산지부 압수수색 당시 학술목적으로만 소지 가능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논리적 토대가 되는 '수령론'이 담긴 CD 등 200여 점이 발견된 바 있음

3) 좌파 전교조는 '폐쇄적 자주' 논리를 주입시켰다

① 전교조가 말하는 '민족교육', 알고 보니 '폐쇄적 자주 교육'

○ 1989년 탄생한 전교조가 가장 중시해 온 것이 이른바 '민족교육'

○ 장혜옥 前전교조 위원장은 "밖에서 우리더러 자꾸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초심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고 그 점에서 우리는 한 치도 틀림없이 초심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이러한 전교조의 '민족교육'은 사실상 '외세'는 내몰아야 할 적(敵)이고 '우리 민족끼리'가 최고라는 배타적인 이분법을 의미

☞ **'폐쇄적 자주'로 자멸을 자초하는 북한과 동행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꼴**

② '통일 윷놀이' 통해 아이들에게 좌파적 사고 강요

○ 전교조가 수업시간에 활용하라고 제시한 놀이인 '통일 윷놀이'는 윷을 던져 '국가보안법' 이나 '냉전의식' 이라고 적힌 지점에 이르게 되면 한 번 쉬는 벌칙이 주어짐. 가장 엄한 벌칙이 주어지는 곳은 '외세(外勢)'라고 쓰인 지점으로 여기에 말이 멈추면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가야 함

○ 전교조는 이 놀이에 대해 '민족 자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놀이다. 놀이 과정에서 통일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저절로 익힐 수 있다'고 설명

○ 그러나 사실상 이런 놀이를 반복할 경우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민족과 외세가 대립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자리 잡게 되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질 위험이 큼

4) 파병 · APEC · 북핵 등 현안마다 좌편향 교육으로 일관했다

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좌편향적 계기수업을 반복했다

※ 계기수업이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주제나 사건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는 수업. 계기수업을 하려면 학교교육과정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사도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학생들도 정치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는 데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전교조가 분석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이나 주장, 정치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입한다는 것

○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 또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

○ 미성숙한 학생에게 정치성이 강하거나 특정 성향의 이념을 심어 줄 우려가 있는 교육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그동안 '이라크 파병 반대'나 '시장 개방 반대' 등 정치색이 짙거나 찬반논란이 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기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보적인 정치의식을 심어주려 노력

☞ **전교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라크 파병, 6 · 15 남북공동선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계기수업 시행**

<전교조의 좌편향 공동수업 일지>

일 시	공동수업 내용
2000년 3월	• 총선수업(4 · 13총선 직전)
2000년 3월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불평등 공동수업 –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고
2003년 4월	• 반전평화수업 (미국 이라크전 관련) – 반미적인 내용 포함
2003년 6월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공동수업 –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등
2004년 3월	• 총선수업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 지지정당(후보) 선택과 그 근거 발표, 각 정당 정책 활동 비교
2004년 6월	• 반전 · 평화 계기수업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 관련) – 한국군 파병의 부당성
2005년 6월	• 6 · 15 남북공동선언 기념 공동수업 – 6 · 15 선언 5주년 기념
2005년 9월	• 사립학교법 개정 계기수업 –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2005년 11월	• 부산전교조, APEC수업 계획 – APEC의 부정적인 측면 부각
2006년 3월	• 제주 4 · 3 항쟁 계기수업 – 반미적인 내용 포함
2006년 5월	• 한미FTA 수업 – 한미FTA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초점
2006년 11월	• '대중매체 바로 읽기' 계기수업

②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 : '그런 국보법 따위 헌신짝으로 던져 버리자'

○ 전교조의 '중등용 국보법 수업지도안'은 학생들이 모둠별로 국보법 토론, 1분짜리 상황극 만들기, '국가보안법 5행시' 짓기, 국보법 노래 배우기 등의 과정을 통해 국보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가르치도록 제시

■ 전교조가 제시한 '중등용 국보법 수업지도안' 내용

단원명 :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 국가보안법 관련 동영상(시사투나잇, 2580등)보기
- 모둠별 토론 : '나도 감옥 갈 뻔했네'라는 주제로 집단토론
- 상황극 만들어 발표하기 :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거야!'라는 내용으로
- 국보법 폐지 주장 발언 함께 읽기 : 민주노동당 노희찬 의원의 국회 5분 발언
- 노래배우기 : '국보법 철폐가3', '통일이 안보다', '몽상' 등

○ '국보법 관련 시 소개하기' 코너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낭송하도록 돼 있는 자료

☞ **'그런 법(국가보안법) 따위 헌 신짝으로 던져 버리자 / 너는 고무하라 나는 찬양하리니 / 너는 잠입하라 나는 탈출하리니 / 오, 우리들의 평화로운 이적행위여(하략)'**

○ 상황극의 경우 '나도 감옥 갈뻔했네'라는 주제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 지도안은 교사가 지도할 활동 방향으로 '나는 그래도 (국보법을) 어길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음

○ '노래 배우기' 활동에서 부를 노래로 소개된 것 중 하나인 '몽상'의 가사는 '국보법과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 현 국가정보원), 이근안(고문 경찰)을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조선일보 지칭) 간첩단 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 전기고문과 물고문, 통닭구이, 비녀꽂이 등도 거론됨

■ **국보법 수업지도안 중 '노래 부르기' 코너에서 부르게 돼 있는 노래**

몽상(夢想)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빌려준다면
한달안에 한나라당 간첩사건 만들 수 있지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이근안을 빌려준다면
한달안에 조선일보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어
아니 한 달까지 필요 없을지도 몰라
저들이 했던 대로
무조건 잡아다가 칠성판에 묶어
전기고문 하고 물고문도 하고
통닭구이 하고 비녀꽂이만 하면
(중략)

■ **전교조 교육자료 중 '퀴즈로 풀어보는 국가보안법'**

• 문 : 1960, 70년대 농민들이 술을 마시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 국보법에 걸려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술의 이름을 두고 ○○○보안법이라고 하는데 이 술의 이름은?

답 : 막걸리

• 문 : 국보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한가지를 고른다면?
① 국제사면위원회 ② 유엔인권위원회
③ 국가인권위원회 ④ 한나라당 ⑤ 민주노동당

답 : ④한나라당

③ APEC 반대 계기수업

○ 'APEC 반대 계기수업' 당시 'APEC 바로알기 수업안'에서는 APEC을 '미국의 입장을 대변할 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묘사

○ 이념 지향적 내용도 문제이지만, 욕설로 가득 찬 내용을 교육 자료로 제공

▶ 전교조 부산지부가 교육용으로 만든 동영상에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저속한 언어와 욕설이 난무



○ 전교조 부산지부는 APEC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담고 있다고 항변했으나,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2005. 10. 31)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진표 교육부총리에 "전교조 부산지부의 APEC 학습안은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 것은 1쪽인 반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은 30쪽에 이른다"고 꼬집으며 "이런 자료가 어떻게 중립성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한 바 있음

④ '제주 4 · 3사건' 계기수업

○ 제주 4 · 3사건 계기수업 그림 자료의 경우, 와흘리 인민위원회라고 쓰인 현판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고 그림 아래에는 '미 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제주 4 · 3사건 후 남한 단독선거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됐다' 등의 설명이 첨부돼 있음

○ 또한 제주 4 · 3사건과 관련해 칠판부착자료로 올려놓은 자료에서는 벌거벗은 남자의 등을 인두로 '치이익~' 지지는 장면, 교수형에 처하는 장면도 등이 묘사돼 있음

〈제주 4 · 3사건 계기수업 그림 자료〉



⑤ '대중매체 바로 읽기' 계기수업

○ 지난 11월 20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비정규직 법안, 북한 핵실험과 북한지원 등에 대한 신문 사설이나 기사를 비교하는 '대중매체 바로 읽기' 계기수업을 진행

○ 전교조는 그 목적을 '학생들이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이것은 전교조가 실시해 온 일련의 '친북 · 반미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

5)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참석했다

① 전북 임실의 K중학교 도덕교사 김모(48, 현재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씨는 2005년 5월 28~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180여명과 함께 참여

② 이 행사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 이 주최했으며, 당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하연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서정길 전농부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

③ 이 자리에서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오늘밤은 회문산 해방구라 말하고 싶다"며 "남녘 동포들이 회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역사를 기리면서 올해는 반드시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외침

④ 학생들은 29일 추모제 본행사를 연 후 회문산에 올라 전북 빨치산들의 자취를 둘러봄

2. 전교조가 교육정책 개혁에 앞장서 반대했다

1) 전교조 입김에 교육개혁정책이 좌초됐다

① 조합원 9만5,000명의 막강한 조직력 내세워 교육정책에 사사건건 반대

○ 전교조는 99년 합법화 된 이후 급속하게 세를 불려나감. 현재 조합원 수가 8만 7000여 명

☞ **전체 교사(34만4천여 명) 네 명 중 한 명이 전교조 교사**



– 자료: 경향신문(2006. 10. 24)

○ 전교조의 영향이 커지면서 교사 성과급 지급, 교원평가 등 교육정책이 매번 전교조의 반대로 차질을 빚음



– 자료: 동아일보(2005. 11. 4)

전교조가 어떤 일 해왔나

■ 촌지 수수 거부(1989년)	학교단위 정회활동
■ 학교장 선출 임기제(1989년 후반)	임기제 도입
■ 해직교사 복직 · 학생인권 강화(1989~1999)	복직 요구해 관철
■ 자립형사립고(2001.6)	귀족학교 양산이라며 반대
■ 성과급 지급(2001.10)	연가 투쟁, 차등폭 축소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2003~2004)	연가 투쟁, 개인정보 수록 폭 축소
■ 고교등급제(2004.10)	형평성 내세워 반대
■ 논술고사(2005.5)	본고사로 전락한다며 반대
■ 교원평가(2005.5 ~ 현재)	교사 통제 수단이라며 반대

– 자료: 중앙일보 (2005. 11. 3)

② 국민이 바라는 교원평가제를 거부했다

○ 교육부는 2005년 5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료교사 다면평가, 학생 수업 만족도 조사,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교원단체에 제안

■ 대상별 평가영역 및 방법

평가대상구분	교 장	교 감	교 사
평가목적	학교경영능력제고	중간관리능력 제고	교수 · 학습지도 능력 향상
평가자	교원, 학부모 교육청인사	교장, 교사, 학부모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생
평가방법	학교경영역량 평가지표 사용		평소관찰, 수업참관, 설문조사
평가내용	학교경영 활동	중간관리자로서의 학교교육지원 활동	수업활동 중심
평가기간	연중평가(11월에 종합)		
관리기관	교육청 교원평가위원회		단위학교 교원평가위원회

■ 교원평가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현행(인사관리형)	개선(능력개발형)
목 적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승진 반영 및 퇴출 언급 없음)
대 상	교사, 교감(교장제외)	교사, 교감+교장 추가
방 법	관리자 평가(교장 · 교감이 평가)	다면평가(관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기 준	전국으로 통일된 지표 사용	자율결정(단위학교 특성 반영)

○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전교조는 공청회 단상 점거,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며 반발

☞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2006. 11. 23)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3.4%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서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황폐화를 우려해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8.7%에 불과해, 찬성의견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이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831명의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이다

③ 학력평가를 반대했다

○ 교육부는 2002년 전국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했으나 전교조가 전 학생 표집을 반대해 10%만 표집 분석했고 그나마 학교별, 지역별, 시도교육청별 비교는 하지 못하도록 저지

○ 이듬해에는 학력 경쟁이 우려된다며 전체 학생의 1%만 시험을 보고 채점하는 것이 아니면 시험을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표집 대상을 10%에서 3%로 축소

④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반대했다

○ NEIS는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와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참여정부 출범 이후 힘을 얻은 전교조는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총력투쟁

○ 정부가 대폭 양보해 2006년 3월부터 교무 · 학사, 입학 · 진학, 보건 등 3개 영역만 분리해 운영하기로 하고, 관리도 중앙정부가 아니라 고교는 단독 서버, 초 · 중교는 15개 학교마다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

⑤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했다

○ 교원성과상여금제도는 '교원 간에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의 일환' 으로 2001년에 도입

○ 정부는 2001년부터 공무원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해 근무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교사들만은 여전히 나눠먹기 유지

○ 그러나, 교육부에서 구성한 교원성과 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는 2001년부터 약 1년간 9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 교직단체 위원들이 평가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교육활동은 평가할 수 없다고 반대

☞ **결국, 능력개발지원비라는 새로운 형태의 나눠먹기식 수당으로 변질된 채 막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마저 거부하고 성과급 반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

○ 4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80%를 균등 지급하고 20%만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자 전교조는 다시 교원성과급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시도

○ 현재의 교원성과급은 교육부안대로 도입하더라도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을 받은 교원 간의 차이가 1년에 18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반쪽짜리에 불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성과급 반납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교육부가 현행법상 교원성과급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하고 장기적으로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막기 위한 고단수 책략**

2) 과다하게 교육정책에 개입했다

① 교원노조법이 '전교조의 힘'

○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교육정책에 간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월 제정된 교원노조법 덕분

○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 장관이었던 1999년 만들어진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원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총리와 단체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이 조항이 전교조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② 외국에선 보기 드문 교육부총리와 교원노조위원장의 협상

○ 노조위원장이 단체교섭안을 내면 교육부총리는 협상에 응해야 함

☞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은 99년 전교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발당함**

○ 하지만, 교육부총리와 노조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서 맞상대하는 일을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음. 한국처럼 교육부 수장이 교원노조와, 행정자치부 장관은 교사를 제외한 일반 공무원노조와 협상을 하는 이중 구조가 아니기 때문(영국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사들의 요구가 논의)

☞ **교육부 장관과 노조위원장이 직접 담판 짓는 구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소모전이 발생**

○ 법에 따르면 단체 교섭 의제는 교원의 임금, 복지후생, 근무조건 등 사회 · 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

○ 문제는 임금이나 근무조건 등 교육부총리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다는 점. 교원의 봉급은 전체 공무원 보수 체계와 연동되어 있고 근무조건도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는 교육 정책과 관련한 전교조의 요구사항이 더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음**

<전교조가 좌지우지한 주요 교육정책 사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책내용

•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와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

전 교조 반대 이유

• 정부가 학생의 신상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정보 유출로 상업적으로 이용될 우려

정책결정 과정

• 김대중 정부, NEIS를 전자정부 중점 과제로 선정(2001년 5월)
• 27개 교육행정영역 인터넷으로 통합 관리 계획발표(2002년 5월)
• 초・중・고 일부 시범 실시(2002년 9월)
• NEIS 개통(2002년 11월)
• 전교조 연가투쟁, 'NEIS 반대 공동수업' 실시(2003년 5 ~ 6월)
• 국무총리실, 절충안 제시 "정보인권침해 우려 있는 교무・학사・보건 등 영역은 NEIS에서 분리" (2003년 12월)
• 인권위, 전교조 주장 수긍(2005년 2~5월)
• 현재 교육부 NEIS의 3개 영역 분리 운영 시행

■ 기초학력평가

정책내용

• 전국 초등 3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기초학력 부진학생 교정학습 프로그램 마련

전 교조 반대 이유

• 학교 간, 시・도 간 과열 학력경쟁, 서열화 유발

정책결정 과정

• 교육부 "학습 부진 학생 판별하겠다" (2002년 7월)
• 초등 3학년 60여 만 명 대상 '읽기', '쓰기', '셈하기' 평가 실시키로 확정(2002년 9월)
• 전교조 "시・도 간 학력 경쟁, 서열화 유발" 이유로 시험 거부(2002년 9월)
• 교육부 초등학생 10%만 표집 조사키로 재결정(2002년 9월)
• 전교조 "시험 준비에 따른 과열 우려"반발, 시험 감독 거부 운동(2002년 9월)
• 교육부 초등학생 3%만 표집해 실시(2002년 10월)

교원성과급제

정책내용

- 교직사회의 경쟁력 유도 위해 전체 교사의 70%에 한해 성과급 차등 지급(기존안)
- 성과상여금 예산의 80%를 균등 지급하고 20%만을 차등 지급(수정안)

전 교조 반대 이유

- 교직은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다

정책결정 과정

- 교원 간에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교원성과상여금제도 2001년 도입
- 교육부에서 구성한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는 2001년부터 약 1년간 9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 교직단체 위원들이 평가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교육활동은 평가할 수 없다고 반대
- 2006년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원성과상여금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80%를 균등 지급하고 20%만을 차등 지급하는 수정안 제안
- 연가투쟁을 벌여 균등 배분 관철

교원평가제

정책내용

- 동료교사 다면평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등

전 교조 반대 이유

- 학부모회 등을 통한 의견 개진
- 동료교사 다면평가는 효과 없다

정책결정 과정

- 안병영 부총리 "욕 먹어도 교원평가 하겠다"(2004년 6월)
- 학계 연구 의뢰, 학부모 참여 교원평가 案 마련(2005년 5월)
- 전교조 "교원평가보다 수업시간 경감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이 우선" 주장
- 전교조, 공청회 단상 점거해 방해(2005년 5월)
- 김진표 부총리 전교조 참여 협의회 구성(2005년 6월)
- 교육부, 전교조, 교총, 학부모 단체 협상 결과 교원 간 다면평가 도입, 평가 결과는 수업 개선에만 활용, 승진 · 연봉에 반영 안 하기로 함
- 현재 교육부 67개 시범학교 지정 · 강행, 2007년부터 전국 500곳으로 확대 시행되고, 2008년부터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

3. 전교조, 교육은 없고 이념만 추구한다

1) 기득권 수호 집단으로 변한 전교조

① 2700여 명 교사 연가투쟁 강행

○ 지난 11월 22일 대학입시가 한창인 시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경고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가투쟁을 강행

※ 연가투쟁이란 교원이 법으로 보장된 연가를 내고, 집회 등을 하는 것

○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원평가제 법제화 추진 전면 중단과 차별성과급제 폐지

☞ **대다수 학부모들이 "교사들도 소비자로부터 경쟁력을 검증 받아야 한다"며 교원평가제와 차별성과급제를 긍정하는 가운데, 전교조 교사들은 교직이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로 연가투쟁 강행**









▲ 투쟁을 부르짖는 전교조와 아이들에게 돌아가라고 호소하는 학부모들 (자료 : 세계일보, 뉴시스, mbn)

② 학교에서 학생들을 버렸다

○ 2,700여 명의 교사들이 불법 집단 연가를 내는 바람에 일선학교 곳곳에서 마찰과 수업 차질 발생



◀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무단결근과 조퇴 등으로 수업 파행이 속출한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칠판에는 3, 4교시 자율학습을 알리는 시간표가 적혀 있음 (자료: 연합뉴스)

2) 교사라기보다 좌파 정치인이다

① '스승은 노동자가 되고 싶다'

○ '스승은 노동자가 되고 싶다', 전교조 제4대 위원장을 지냈던 이영희의 자서전, '교사들은 '억지 스승'의 허위의식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노동자로 우뚝 서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

○ 이 책의 제목을 그대로 보여주기라도 하듯,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그동안 수차례 교원 평가 중단, 성과급 차등 지급 반대, 한미 FTA 반대 등을 외치며 집회와 시위를 일삼음



◀ '05.11.10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150여명이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교원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는 모습
(자료 :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 춘천지부, 충북지부 등은 2006년 9월 14일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대하며 일선 교사들이 반납한 성과금을 해당 도교육청에 전달하려 했으나 교육청 측의 거부로 무산 (자료: 연합뉴스)

② 현안 있을 때마다 연가투쟁 강행하는 정치교사들

○ 99년 합법화 된 이후 2000년부터 최근까지 사립학교법 개정,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거부, NEIS 반대, 교원평가 저지 등 12번의 연가투쟁 강행

<전교조 연가투쟁 일지>

일 시	공동수업 내용
'00.10.13 ~ 18	• 교육재정 확충, 사립학교법 개정, 수석교사제 중단 요구
'00.10. 24	• 연금법 개악저지, 사립학교법 쟁취, 공교육 파탄정책 분쇄
'01.10. 10	• 자립형 사립고 저지, 성과 상여금 반대
'01. 10. 26 ~ 27	• 같은 요구 제시
'01. 11. 14 ~ 17	• 교과선택제 유보, 중등자격교원의 초등임용 반대
'03. 3. 21	•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거부 및 이라크 파병방침 철회
'03. 6. 2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교원 지방직화 반대
'03. 6. 25	• NEIS 반대, 교원 지방직화 반대
'04.11. 26	• 비정규직법안 중단,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05.10. 27	• 교원평가 저지
'06. 10. 27	• 차등성과급 · 교원평가제 · 연금법 개악 저지와 한 · 미FTA 저지
'06. 11. 22	• 교원평가제 저지

노무현 정권의
대학입시 정책은 실패했다

Ⅳ

노무현 정권의 대학입시 정책은 실패했다



1. 대입제도 혼선으로 부작용을 심화시켰다

1) 노무현 정부 대입제도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입시생들 혼란을 가중시켰다

☞ 2005년 입시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2008년 이후 새로운 대입제도 발표 등으로 입시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① 대학입시는 '입시지옥' 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는 주범

- ○ 과열된 입시경쟁 아래서 학생들은 불필요한 암기교육과 지나친 학습 부담에 시달림
- ○ 학부모들은 허리 휘는 과외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고통이 더욱 가중

② 2008년 새로운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신과외, 논술과외 등 사교육 문제 악화' 와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 가중'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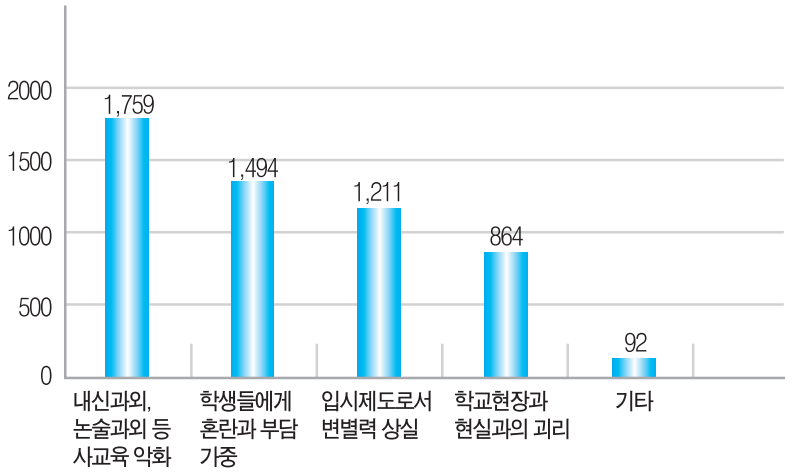
③ 2008년 새로운 대입제도로 학교현장에 혼란과 부담이 가중된다는 응답 62%(전국 인문계 고교 교사 5,859명 대상 설문조사)

- ○ 사교육 악화시킬 것 69%
- ○ 학교현장에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것 62%
- ○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15%에 불과
- ○ 2008년 새 대입제도에 관해 잘 알고 있다는 교사는 42%
- ○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7.1%
- ○ 새 대입제도가 학생들에게 과다경쟁을 야기시킨다 60.3%

〈전국 인문계 고교 교사 5,859명 대상 설문조사,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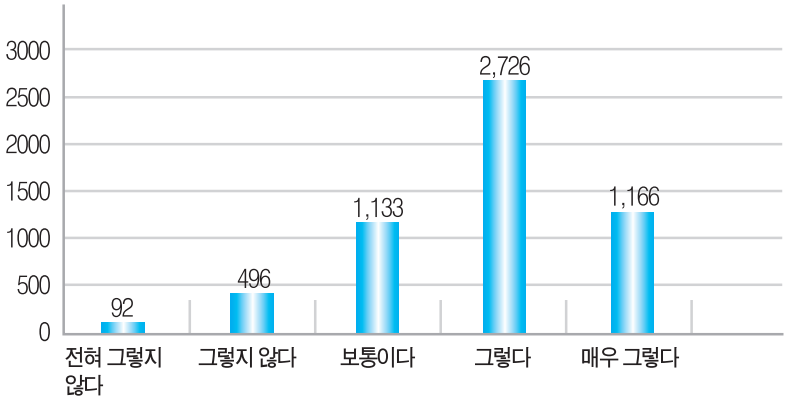
1 2008년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교원(30.0%)이 '내신과외, 논술과외 등 사교육 문제 악화'라고 응답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 가중이 25.5% ▲입시제도로서 변별력 상실이 20.7% ▲학교현장과 교육현실과의 괴리는 14.7%로 나타나, 교원들은 2008년 새 대입제도에 대해 사교육 악화 문제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음

구 분	빈 도	백분율(%)
내신과외, 논술과외 등 사교육 악화	1,759	30.0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 가중	1,494	25.5
입시제도로서 변별력 상실	1,211	20.7
학교현장과 교육현실과의 괴리	864	14.7
기 타	92	1.6
무응답	439	7.5
합 계	**5,8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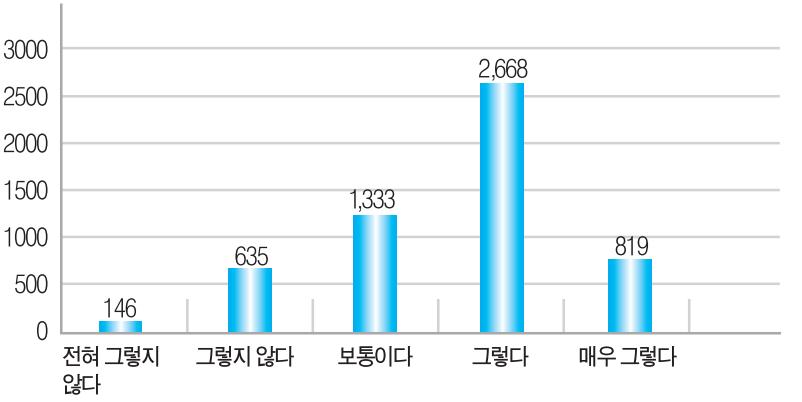
2 「2008년 새 대입제도가 사교육문제를 악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악화시킬 것이다(69.4%)』,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다(10.4%)』로 나타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교원들은 사교육 완화효과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빈 도	백분율(%)	유효응답자 중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2	1.6	1.6
그렇지 않다	496	8.5	8.8
보통이다	1,133	19.3	20.2
그렇다	2,726	46.5	**48.6**
매우 그렇다	1,166	19.9	**20.8**
소 계	**5,613**	**95.8**	**100**
결측치	246	4.2	
합 계	5,8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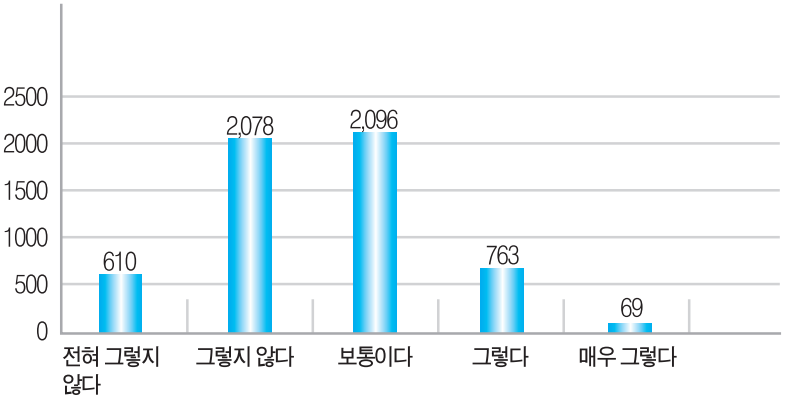
3 「2008년 새 대입제도가 학교현장에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응답(62.3%)』, 『그렇지 않다는 응답(13.9%)』에 그쳐, 성급한 새 대입제도 도입이 교육현장에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음

구 분	빈 도	백분율(%)	유효응답자 중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46	2.5	2.6
그렇지 않다	635	10.8	11.3
보통이다	1,333	22.8	23.8
그렇다	2,668	45.5	**47.6**
매우 그렇다	819	14.0	**14.7**
소 계	**5,601**	**95.6**	**100**
결측치	258	4.4	
합 계	5,8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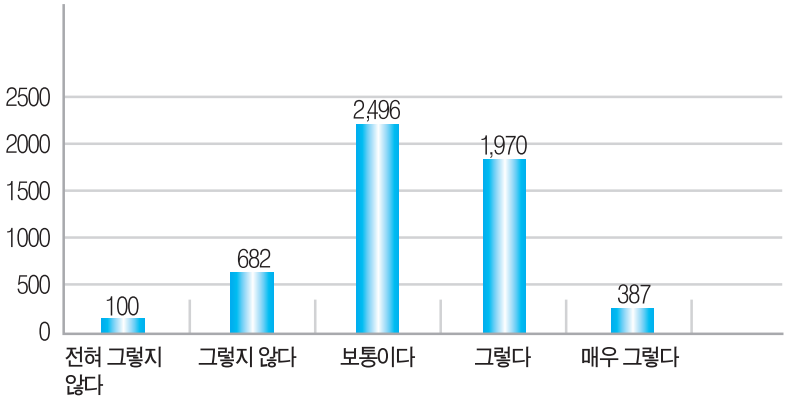
4 반면, 『새로운 대입제도로 공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14.8%)』,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47.9%)』라고 응답하여, 새 대입제도가 교육현장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구 분	빈 도	백분율(%)	유효응답자 중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10	10.4	10.9
그렇지 않다	2,078	35.5	37.0
보통이다	2,096	35.8	37.3
그렇다	763	13.0	13.6
매우 그렇다	69	1.2	1.2
소 계	5,616	95.9	100
결측치	243	4.1	
합 계	5,859	100.0	



5 「2008년 새 대입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41.8%)』, 『보통(44.3%)』, 『모른다(13.9%)』고 응답하여, 학생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조차 새 대입제도에 관해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차후 진학지도의 어려움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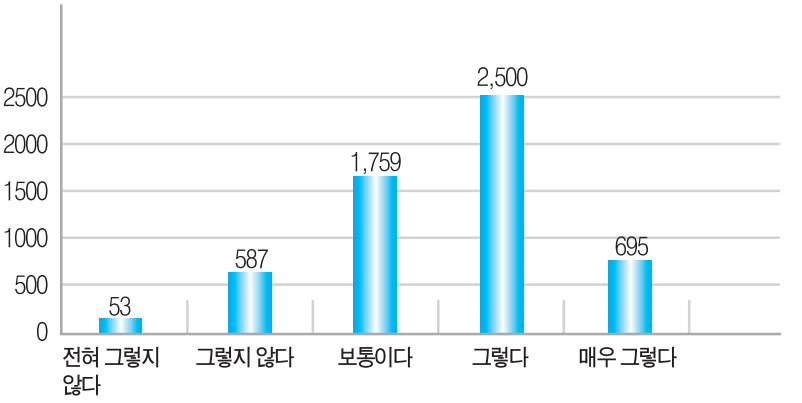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백분율(%)	유효응답자 중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00	1.7	1.8
그렇지 않다	682	11.6	12.1
보통이다	2,496	42.7	44.3
그렇다	1,970	33.6	**34.9**
매우 그렇다	387	6.6	**6.9**
소 계	**5,635**	**96.2**	**100**
무응답	224	3.8	
합 계	5,859	100	



6 「논술시험 및 내신비중 강화 등 새로운 입시제도가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지」알아본 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57.1%)』고 응답한 반면, 『어려움이 없다(11.5%)』에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일선학교에서 이처럼 새로운 입시의 핵심적 요소를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사교육기관에 의존시킬 가능성을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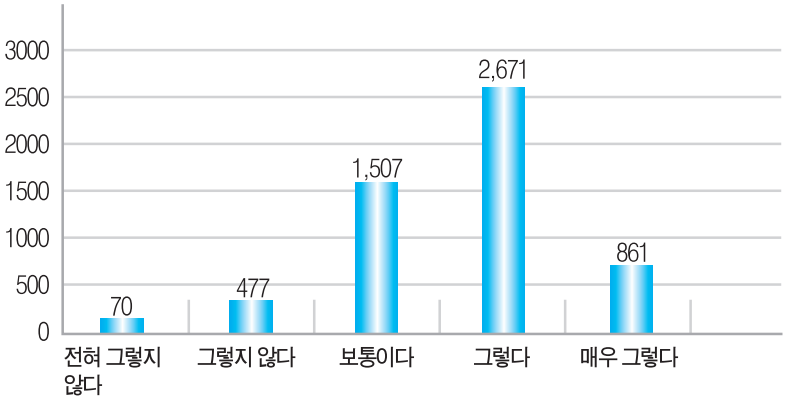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백분율(%)	유효응답자 중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3	0.9	1.0
그렇지 않다	587	10.0	10.5
보통이다	1,759	30.0	31.4
그렇다	2,500	42.7	**44.7**
매우 그렇다	695	11.9	**12.4**
소 계	**5,594**	**95.5**	**100.1**
무응답	265	4.5	
합 계	5,859	100.0	



7 2008년도 대입제도가 최초로 적용되는 현재 고1 학생들의 내신시험을 둘러싸고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은 이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음

: 『새 대입제도가 학생들에게 과다경쟁을 야기시킨다(60.3%)』고 응답하여, 다수의 교원들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음

구 분	빈 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0	1.2
그렇지 않다	477	8.1
보통이다	1,507	25.7
그렇다	2,671	**45.6**
매우 그렇다	861	**14.7**
무응답	273	4.7
합 계	**5,859**	**100.0**



8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8년 대입제도의 적용을 받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한 지 한 학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는 여전히 혼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원들은 대체로 2008년도 대입제도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2) 2008학년도 입학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2006년 학교현장에서는 예견되었던 부작용이 발생되었다

① 2008년 입시제도 시안이 발표된 이후 학력격차, 고교등급제 의혹, 내신 부풀리기 등 문제가 사회 계층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

- ○ 노무현 정부는 많은 국민의 반대의견에도 문제가 많은 입시제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2008년 새 대입제도 확정발표
- ○ 결국, 2005년 대입 수능시험에서는 사상초유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나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

② 내신비중을 강제로 높이면서 대학으로 하여금 학교 간 차이마저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 ○ 대학들은 내신비중을 높이기보다는 본고사 성격의 논술 추진
- ○ 또한, 학교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입학제도는 개별학교의 노력은 위축시키면서 입시의 경쟁압력을 학생들에만 떠넘김

③ 결국, 동료학생들은 서로 직접적인 경쟁상대가 되었고, 열심히 하는 학생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원망을 듣는 처지가 됨

2. 대학 입학정책 실패로 피해입은 학생들

1) 고교간 학력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지금까지 입시제도 개혁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학교현장과 입시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큰 괴리 때문

○ 내신제도가 1980년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주요원인은 평준화 논리에 따라서 학교 간의 학력 차이 등 학교의 특성을 내신 산정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

○ 아무리 우수한 고교라도 그 고교의 10등은 다른 고교의 10등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개별대학들은 학생선발과정에서 고교내신을 전형자료로 활용하기를 꺼림

☞ 학교별 차이가 엄격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의 수업을 받았다는 전제는 옳지 않음

② 고교간 학력 차이는 매우 크다

○ 재학생 90% 이상이 수능성적 상위 10% 이내에 드는 고등학교가 15개교나 되는 반면, 상위 10%에 속하는 재학생의 비율이 2% 미만인 학교도 1,044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교간 학력격차 및 내신 부풀리기 사례 – 1,847개 고등학교별 분석>

수능 상위 10%에 속하는 재학생 비율(%)	고등학교수 (1,847개)	내신성적 '수' 부여 비율(%)		
		최대비율	최소비율	차 이
90–100	15	88.3	35.4	52.9
80–90	9	79.8	29.0	50.7
70–80	6	38.2	26.5	11.8
60–70	4	68.0	33.4	34.6
50–60	9	36.0	23.2	12.8
40–50	9	38.4	21.5	16.9
30–40	13	43.0	13.7	29.3
20–30	42	54.1	10.9	43.2
15–20	107	35.6	9.7	25.9
10–15	216	36.3	6.9	29.3
8–10	88	32.4	9.6	22.8
6–8	103	31.6	6.3	25.3
4–6	82	37.6	8.1	30.0
2–4	100	31.8	7.0	24.9
0–2	1,044	64.3	2.9	61.4

– 자료 : 김성인(2001).「대입전형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교육개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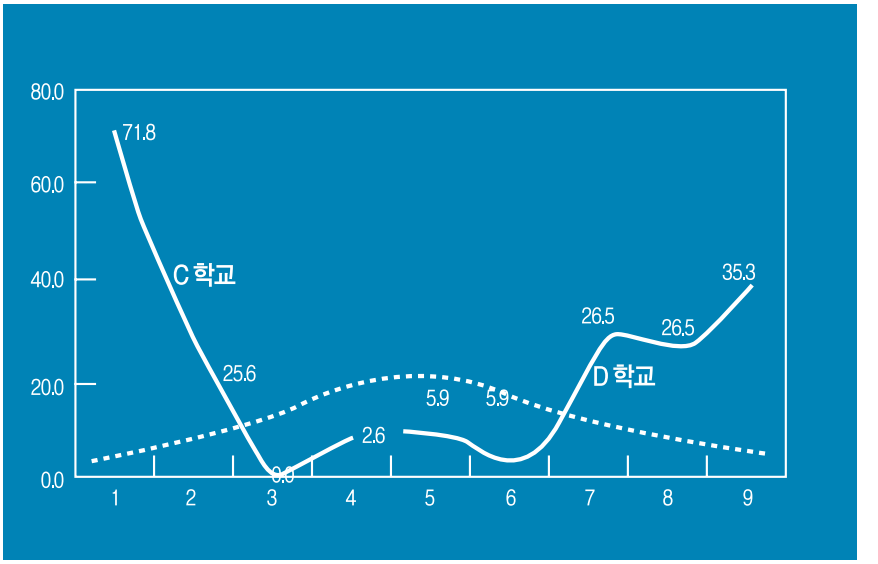
○ 〈아래 그림〉과 같이 C학교는 대도시에 있는 일반계 고교이고, D학교는 중소도시에 있는 실업계 고교임

○ C학교 학생의 경우, 1등급에 71.8%, 2등급에 25.8% 등 상위권 1~2등급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속해있는 반면, D학교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전국기준으로 5등급에 속해 있고, 전체의 약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하위권 7~9등급에 속해 있음

○ 그러나, 지금 대입제도는 이러한 학교 간 격차, 학생 간 격차와는 상관없이 모든 학교의 내신을 똑같이 인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 **다시 말해, C학교 내신 1등급 학생과 D학교 내신 1등급 학생을 똑같은 수준으로 평가해야 함 → 대학들로서는 순응하기 어려운 조건임**

〈극심한 전체 고교 간 학력격차〉



– 출처 : OECD PISA 2003년 원자료

③ 학력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게 할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한다

○ 수능성적이 비슷한 수준의 고등학교들 간에도 '수'를 주는 비율이 60%까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능에서 최저성적대 고등학교 중에서 최고성적대 고등학교 보다 '수'를 주는 비율이 더 높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내신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남

○ 고교 간의 학력 차이를 내신에서 인정하지 못하면 성적 좋은 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고등학교일수록 그 학교 학생들이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 발생

○ 또한, 이런 제도 아래서는 같은학교 동급생들은 보다 나은 내신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경쟁상대가 됨으로써 학우간의 협력을 매우 어렵게 하는 부작용 발생

○ 학교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신도입은 오히려 학교 간의 경쟁을 축소시키는 심각한 부작용 초래

○ 학교에서의 석차가 곧 입시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이로 인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재학중인 학생이 일반고교로 전학하는 현상이 나타남

2) 수능 9등급제의 대입제도 한계로 고교등급제 혼란

① 안병영 장관(97학년도 대입)의 변별력 높인 어려운 수능과 이해찬장관(99학년도 대입)의 변별력 낮춘 쉬운 수능의 '수능 널뛰기'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97학년도 대입 수능 (안병영 장관)	• 종합적인 사고력과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제의 비중을 높여 지능고사의 성격을 첨가시켰다... 전체적으로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높였다 ('96. 11. 21 기자간담회)	수능의 변별력 강조
99학년도 대입 수능 (이해찬 장관)	• 쉬운수능만 강조	안장관 시절 수험생 평균(170.7) 보다 무려 70점 정도가 상승 (평균 240.3)

〈 '97 대입~' 02 대입 연도별 수능시험 성적추이〉

구 분	1997대입	1998대입	1999대입	2000대입	2001대입	2002대입
전체평균	170.7	212.5	240.3	249.6	277.2	210.8

② 특히, 최근 고교등급제가 문제가 된 대입제도는 본래 2002년 대입제도(이해찬 장관 시절)에 따른 것으로 겉으로는 대입을 대학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 쉬운수능으로 변별력은 없애고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무시험 전형 입학제도를 도입해놓고 모든 책임은 대학자율화란 명목으로 대학에 떠넘김

③ 현행 수능결과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등급만을 제공

○ 수능성적 1-2점을 더 따기 위한 경쟁이 없어지는 만큼, 수능 등급 하나를 더 올리기 위한 중위권 경쟁은 가열될 것임

○ 한 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바뀌게 될 것이나, 이를 소명할 기회가 없어짐

○ 결국, 최상위 학생들의 학습의욕은 좌절시키고 중위권 학생들의 경쟁을 심화시키게 되며, 수능성적을 9등급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실익 없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

④ 또한, 수능성적의 표기방식이 9개 등급으로만 제한됨으로써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형자료는 더욱 제한

○ 학교 간 학력차이를 금지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내신의 활용비중은 높아질 수 없게 되며,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이 높아짐

○ 따라서, 본고사 부활 또는 논술 및 면접의 본고사화 우려가 높아짐

○ 특기적성 및 학업성취에 대한 객관적인 변별력 확보 없이는 대학들의 편법적 학력측정 지속될 것임

⑤ 최근 2008년 대입제도개선 시안은 과거 '97년 대입(안병영 장관)에서 강조하였던 변별력 있는 수능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

○ 학생부나 내신이 제대로 기록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백분위 및 표준점수를 제공하지 않는 수능등급화로 변별력을 더 낮춘다면, 학생들의 등급을 올리기 위한 경쟁이 반복되면서 1~2점차로 등급이 바뀐 학생들의 재수를 유도할 우려가 매우 큼

3) 내신 부풀리기 무방비

① 내신 부풀리기는 교육부의 2008년 대입제도 개선방안에서도 인정

>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이 저조하고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정시모집에서 대학의 학생부 활용 미흡,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 라는 사회풍조 만연"(2008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시안)

② 내신 부풀리기가 있다는 것을 교육부마저도 인정했다는 것은 2002년 대입제도가 명백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쉬운 수능과 모의고사 금지 등 대입에서 학생 학업성취를 의도적으로 경시함으로써 최대의 피해자로 전락한 학생층이 바로 새 대입제도 적용을 받은 이해찬 1세대로 2002년 대입에서 평균 67점 정도 하락하는 대폭락을 겪음

4) 획일적 수능제도

①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학생의 선택폭을 넓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수능시험은 아직도 '획일화' 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여전히 수능시험은 학생들의 능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틀의 시험을 보도록 강요

○ 국민공통기본교과,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진 제7차 교육과정 중에서 유독 고등학교 2-3학년에서 배우는 심화선택 교과목만을 중심으로 수능시험 출제

☞ **대부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번의 시험으로 수학능력을 측정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함**

② 수능시험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괴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과외와 재수를 부추김

○ 수능시험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를 측정하는 학력고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파악하는 학업적성검사도 아닌 매우 애매한 성격의 시험

○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수능시험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사교육 팽창을 크게 부추김

○ 또한 재수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학업부담 없이 수능시험만 준비하면 되는 반면, 재학생들에게는 학업과 수능시험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능시험과 학교수업의 괴리가 클수록 재수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기에 유리

③ 고등학교 과정 3년을 단 하루의 시험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결국 학생들에게 암기학습을 강요하게 됨

④ 학생들의 학업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 더욱 심화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뒤쳐지는 학생에게는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과목의 선택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선택 폭의 확대가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5) 학생의 대학선택권 제한

① 정시모집에서 가 · 나 · 다의 세 군으로 각 대학을 분리하는 제도는 수험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를 제한하는 것임

- ○ 예컨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같은 "가"군에 있으면, 이 두 학교에 동시 지원이 불가능
- ○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가 전체 199개 대학교 중에서 3개 대학교로만 제한할 경우, 어느 대학이든 골라 갈 수 있는 최상위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대학진학 확률이 낮아짐으로써 학생부담이 커짐
- ○ 결국, 많은 학생이 적합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심지어는 더 적합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을 재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며, 학생 간의 지나친 소모적인 경쟁이 심화

②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정시모집을 위하여 주어지는 시간이 12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학생들과 대학들 간의 최적의 결합을 찾아내는 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

6) 대입제도를 수시로 바꾸어 혼선 가중

☞ 새로운 대입제도 개선시안 내놓고 논란이 일자, 4개도시 공청회 실시 후 다시 대입案 발표 연기 등 대입혼란 증폭

① 가장 신중해야 할 대입案을 밀실행정으로 결정해놓고, 고교간 학력격차, 고교등급제, 내신 부풀리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책임하게 대입 제도안을 몇 주 간격으로 수차 연기함으로써 당장 대상(특목고, 외고지망생)이 되는 중3생의 고교진학결정에 불확실성을 크게 증폭

② 겨우 4개 도시의 형식적인 공청회로 논란막기 급급하여 4개 도시 공청회마다 토론자 그룹 거의 유사하고(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교총, 혁신위위원등), 공청회가 아닌 업무보고회 수준임

3. 선진국의 대학입시제도에서 배워야 할 점

1) 미국의 대학입시제도

① 미국의 대학은 주로 학생의 고등학교 성적(High School GPA), 입학시험성적(Admission Tests), 고등학교 교육과정(High School Curriculum)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

② 이외에도 다양한 전형방식이 존재

○ 4년제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추천서(Letters)와 자기소개서(Essays)를 더 중시하는 반면, 공립대학은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

○ 입학시험이라 할 수 있는 SAT Ⅰ이나 ACT 외에 학업성취시험이라 할 수 있는 SAT Ⅱ도 입학심사의 기준이 됨

③ 미국의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성적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입시기준으로 작용하는 까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특히 미국의 고등학교는 '심화과목(AP: Advanced Placement)'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수준별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미국 4년제 공립 및 사립대학의 입학전형 기준>

요 소	요소중요성의 평균							
	공립 4년제 대학교				사립 4년제 대학교			
	1979년	1985년	1992년	2000년	1979년	1985년	1992년	2000년
고등학교 성적(석차)	4.0	3.9	4.0	**4.0**	4.2	4.0	4.0	**3.9**
입학시험 성적	3.5	3.5	3.6	3.7	3.4	3.4	3.4	3.6
고등학교 과목유형	2.5	2.9	3.2	3.0	3.1	3.3	3.3	3.2
대학수준 학업	–	–	2.7	2.8	–	–	2.9	3.0
AP수업 등록	–	–	–	2.2 (3.0)	–	–	–	2.5 (3.1)
AP수업 내신성적	–	–	–	2.2 (3.0)	–	–	–	2.5 (3.1)
추천서	2.1	1.9	1.9	**2.0**	2.9	3.0	3.0	**3.0**
자기소개서	1.6	1.6	1.7	**2.0**	2.9	3.0	3.0	**3.0**
AP 시험성적				1.8 (2.7)				2.1 (2.8)

학업성취시험 성적	1.7	1.6	1.6	1.7 (2.7)	2.4	2.1	1.9	2.1 (2.8)
포트폴리오, 오디션 등	1.8	1.9	1.7	1.7	2.1	2.1	1.9	2.1
SAT Ⅱ	–	–	–	1.6 (2.9)	–	–	–	1.8 (2.8)
면 접	2.0	1.7	1.7	1.6	2.9	2.8	2.7	2.7
전공선언	1.9	1.8	1.8	1.6	1.9	1.8	1.7	1.7
거주 주(州)	1.6	1.8	1.8	1.5	1.3	1.2	1.2	1.2
소수그룹	–	–	2.2	1.4	–	–	1.8	1.5
건 강	1.4	1.4	1.4	1.3	1.7	1.5	1.4	1.3
거주국가	–	–	1.6	1.3	–	–	1.4	1.4
장애인	–	–	1.4	1.2	–	–	1.2	1.2
나 이	–	–	–	1.2	–	–	–	1.1
고교별 학생의 비율	–	–	–	1.1	–	–	–	1.1
성 별	–	–	1.2	1.1	–	–	1.4	1.3
전일제 / 파트타임	–	–	1.2	1.1	–	–	1.4	1.3
재정보조 필요	1.2	1.2	1.2	1.1	–	1.4	1.3	1.3
대학교수	333	412	366	305	648	823	784	657

– 입학시험 성적은 SAT Ⅰ 이나 ACT 성적, 요소 중요성은 중요도(1~5)의 평균값, 1은 '고려하지 않음(Not considered)', 2는 '조금 고려함(A Minor factor)', 3은 '비교적 중요(A moderately important factor)', 4는 '매우 중요(A very important factor)', 5는 '제일 중요(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에 각각 해당, 괄호 안의 숫자는 '고려하지 않음'을 제외하고 산출한 평균값

④ 미국의 고등학생이 대학입학시험에는 미국식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할 수 있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와, 미국식 학력고사라 할 수 있는 ACT(American College Testing)가 있음

○ 미국의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에 SAT나 ACT에 선택적으로 응시

⑤ 미국의 대학입학 시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미국의 시험은 학생능력에 따른 수준별 시험이며, 시험별로 성격이 다름

○ 만일, 학생이 학교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다면 ACT에 응시하고, 수학능력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SAT에 응시

○ 시험의 횟수도 일년에 여러 번 응시 가능, 수험생은 2번 이상 동일한 시험에 응시

○ 또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험을 치를 수 있어 응시의 기회가 많이 주어짐

2) 영국의 대학입시제도

① 영국의 교육제도는 '자격기반 교육체제(qualification-based education system)' 구축

-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영국학생은 의무교육기간인 만 16세까지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 기본중등교육수료증(GCSE :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획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
- 이후 2년간은 대학입시 준비과정인 A레벨(GCE A level : General Certification of Education Advanced Level)과정에서 세 과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공부
- 그 다음 시험을 치러 A레벨 수료증을 과목별로 획득

② 교육과정 및 대학입시 자격시험

- 제4차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Programme)에 의해 현재 14~16세의 영국학생들은 영어, 과학, 외국어, 체육, 수학, 시민, 정보통신기술 과목을 학습
- '기본 중등교육 수료증(GCSE)' 을 부여하는 민간 교육평가 전문기관(GCSE Awarding Body)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학교마다 수료증을 부여하는 기관이 다름
- 학생은 6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고, 대개는 최소한 5개의 과목별 시험에 응시하며, 대다수의 학생은 GCSE 영어, GCSE 수학, GCSE 과학 시험을 채택하고, 나머지 2개는 GCSE 기타과목이나 GCSE 단기과목 중에서 골라 응시
- GCSE시험은 수준별 시험으로, 대다수 과목의 시험이 '고급시험' 과 '기초시험' 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미술, 음악, 체육, 역사시험은 수준별 구분이 없지만, 수학 시험은 세 수준으로 나누기도 함
- '고급시험' 의 성적은 A부터 D까지의 점수로 표기되고, '기초시험' 의 성적은 C부터 G까지의 점수로 표기하며, 고급시험과 기초시험 점수에 C, D가 겹치는 이유는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험 당일 평소 실력보다 지나치게 좋게 나오거나 나쁘게 나오는 결과를 얻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GCE A레벨은 학생이 GCSE시험 응시 후 이수하는 2년간의 학습 과정이며, 각 대학 학과는 입학기준으로 보통 A레벨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기 때문에, A레벨 시험은 사실상 영국의 대학입학시험이라 할 수 있음

③ 영국의 자격시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QC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로, 영국의 교육부가 후원하는 독립기관이며, GCSE나 A레벨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민간교육평가전문기관을 감독하고, 국가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도 담당

④ 영국 대학입학 중앙관리처(UCAS)

- ○ 영국의 대학과정에서 학생과 대학의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이 대학입학중앙관리처(UCAS: 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
- ○ 모든 학생의 대학입학원서가 먼저 UCAS로 보내지며, 대학의 합격자도 UCAS를 통해 발표
- ○ 영국의 대학지원은 일종의 선지원 · 후시험 방식으로 진행
- ○ 학생이 지원을 하면, UCAS가 조건부 합격, 무조건 합격, 불합격의 양식으로 학생에게 지원결과를 통보 : 조건부 합격은 해당대학이 학생의 합격 여부를 시험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한다는 뜻이며, 학생이 받아야 하는 최종성적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임
- ○ 학생은 합격을 통보받으면 완전수락, 보험수락, 거절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완전수락은 1개의 대학에 대해서만 가능 : 학생은 완전수락을 선택한 대학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함
- ○ 두 대학에서 조건부 합격의 통지를 받은 학생이 한 학교에 대해서는 완전수락을 하고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보험수락을 했을 때, 보험수락을 한 대학의 조건이 완전수락을 한 대학의 조건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임 : 만일, 완전수락한 대학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보험수락한 대학의 요구조건은 만족시켰다면 후자에 입학하면 되며, 여러 대학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완전수락과 보험수락의 의사를 표시한 두 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단 합격통지를 거절해야 함
- ○ 학생의 최종 입학여부는 UCAS가 각 대학에 전달함

〈영국 대학의 합격통지와 학생의 수락방법〉

수락방법	설 명
무조건 합격' 한 대학에 완전수락 (UF: Firmly Accepted Unconditional Offer)	• '무조건 합격' 한 대학에 완전수락할 경우, 보험수락을 못하면 나머지 대학의 입학을 거절해야 한다
조건부 합격한 대학에 완전수락 (CF: Firmly Accepted Conditional Offer)	• 조건부 합격한 대학에 완전수락하고 보험수락을 안 할 경우 나머지 대학의 입학을 거절해야 하고, 해당대학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조건부 합격한 대학에 완전수락 및 무조건 합격한 대학에 보험수락 (CF+UI: Firmly Accepted Conditional offer plus a Unconditional offer as an Insurance)	• 조건부 합격한 대학에 완전수락하고 추가로 무조건 합격한 대학에 보험수락할 경우, 완전수락한 대학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보험 수락한 무조건 합격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조건부 합격한 대학에 완전수락 및 조건부 합격한 대학에 보험수락 (CF+CI: Firmly Accepted Conditional offer plus a Conditional offer as an Insurance)	• 조건부 합격한 대학에 완전수락하고 추가로 조건부 합격한 대학에 보험수락할 경우, 완전 수락한 대학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보험수락한 조건부 합격한 대학의 조건을 만족시켰을 경우 보험 수락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 UCAS(www.ucas.com)

3)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① 일본의 대학은 입학생을 선발하는 입시과정에서 한국의 대학보다 폭넓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일본의 대학입시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보다 다양하고 복잡

② 대학입시 센터시험(大學入試センター 試驗)

○ 일본의 대학입시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번 변화

○ 1970년대 개혁안의 핵심은 대학입학시험의 이원화였음

– 1단계에서는 고등학교 성취도 시험인 '공통시험'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본고사와 유사하게 개별대학과 학부가 독자적인 학력시험을 실시

– 입학지원자의 최종합격은 이 두 시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

○ 국립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부 고등학교 과정에 맞춘 5교과 7과목의 공통시험에 응시

○ 각 대학은 대학입시 센터에서 통보하는 지원자의 공통시험 종합점수와 대학 및 학부별로 실시한 학력시험점수를 종합해 합격 여부를 가림

○ 개별대학에서 실시하는 2단계 '학력시험'은 과목수를 제한하고 시험의 내용이 공통시험과 겹치지 않도록 했으나, 객관식 출제방식으로 인해 제한된 사고력만이 요구되고, 대학을 서열화한다는 비판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부터 새로운 시험방식으로 대학입시센터시험이 실시

③ 대학입시 센터시험의 네 가지 특징

○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센터시험을 활용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어 사립학교의 숫자는 처음 시험이 도입된 이후 큰 폭으로 증가

○ 아라카르트(アーラーカルト,a la carte) 방식 도입

- 아라카르트는 불어로 일품요리(一品料理) 또는 선택요리라는 뜻이 있는데, 손님이 식당에서 한 가지 음식을 선택해서 주문하듯 각 대학이 자유롭게 센터시험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 과거 공통 1차 학력시험은 5교과를 일률적으로 포함했지만, 이제 대학은 교과의 시험만 선택할 수도 있음

○ 입학전형방식이 다양화

- 학력시험 외에 면접, 논술시험, 실기검사가 실시되기도 하고, 추천입학, 귀국자녀와 사회인을 위한 특별전형 방법이 도입
- 일부 대학은 '입학관리처(어드미션 오피스)'를 설립하여 일반적인 입학원서 외에 고등학교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작성한 대학지원사유서, 고등학교 졸업 후 활동보고서 등을 받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면접을 실시해 학생을 선발

○ 국공립대학을 복수지원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음

- 입학전형과정을 전기일정과 후기일정으로 나누어 분할 모집하는 방식 도입

④ 동경대학(東京大學)의 입시

○ 동경대학은 입학생 선발을 위해 전기, 후기 분할모집하며, 센터시험 외에 자체적인 학력시험도 실시

○ 대학지원자는 전기일정에 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한 개, 후기일정에 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한 개, 총 2개의 대학에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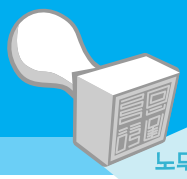
○ 전기일정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는 대학의 학부에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한 다음이면 후기일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후기일정으로 지원한 대학에는 입학할 수 없음

○ 학생의 선발은 대학입시 센터시험과 제2차 학력시험성적을 종합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시험과목과 세부사항은 단과대 및 학부에 따라 차이가 남

노무현 정권은
학교폭력을 심화시켰다

V

노무현 정권은 학교폭력을 심화시켰다



노무현 정권
교육정책 실패

1.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실패했다

1) 학교폭력은 나날이 더 잔혹해지고 있다

①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15명 사망

○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학생은 자살 8명을 포함해 15명

☞ 학교폭력예방센터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자살한 학생 수를 3명으로 축소 보고했다고 비판

■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학생들(2005년)

홍모(18 · 고3)군	경기 안산,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자살
변모(12 · 초6)군	부산,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자살
유모(16 · 고1)양	인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자살
이모(18 · 고3)군	충남 공주,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
이모(17 · 고2)양	충북 충주, 집단 폭행과 괴롭힘으로 자살
김모(16 · 중3)군	경기 화성,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
이모(16 · 고1)군	전북 순창, 집단폭행으로 타살
박모(14 · 중2)군	경북 영주, 폭행으로 타살
현모(16 · 고1)군	서울, 폭행으로 타살
홍모(14 · 중2)군	부산, 폭행으로 타살
변모(11 · 초4)군	충북 증평, 성추행 후 타살

– 학교폭력예방센터 집계



◀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마련 촉구 집회'의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들 (자료: 한국일보)

② 계속되는 집단폭행 동영상 파문

○ 학교폭력이 단순히 폭력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그 잔혹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

○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지난 12월 22일 "집단폭행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안산 ㅇ중학교 3학년 ㄱ(16)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힘



◀ ㄱ양은 함께 사귀는 남학생 문제로 친구인 ㅇ(16)양과 사이가 벌어지자 지난 8일 ㅇ양을 집으로 불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폭행. 이 과정에서 ㄱ양 등 2명은 ㅇ양을 마구 때렸고 다른 2명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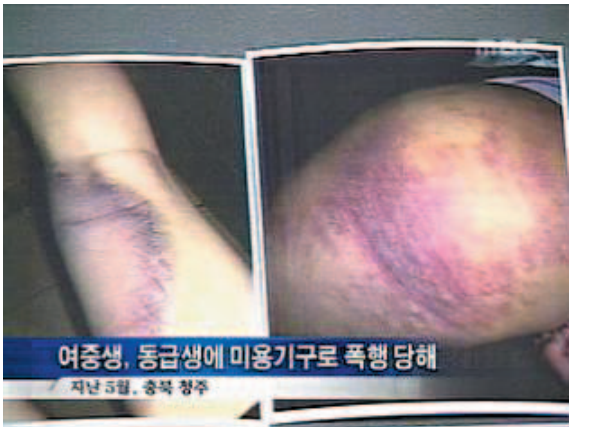
③ 고대기를 이용해 팔을 지지는 등 폭력 잔혹화

○ 충북 청주의 정모양(14. 모여중 3년)은 동급생들로부터 교실에서 일명 고데기(미용기구)로 팔에 화상을 입는 등 상상을 초월한 폭력에 시달림

○ 정양은 20일 동안 폭행을 당한 후 고데기로 인한 화상이 악화되고, 꼬리뼈가 튀어나오는 등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음

☞ **"죽을만큼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두 명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잡는 바람에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도 했어요." "상처가 아물 때쯤 친구들이 찾아와 상처 부위를 강제로 뜯어냈다"**





④ 학교폭력에 흉기사용 확대

○ 지난 4월 11일, 전주에서 평소 학교폭력에 시달려 온 초등학생 쌍둥이 형제가 자신들을 괴롭혀 온 같은 학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찌른 사건 발생

○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전주시 S동 모 아파트 옥상에서 평소 자신들을 괴롭혀 온 B군을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남

○ 조사결과 A군 형제는 2년 전부터 B군에게 괴롭힘을 당해왔고 지난 3일 또다시 폭행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온 것

⑤ '왕따' 확생들의 계속되는 사고

○ 2005년 11월 30일 경기 화성시 장안면 김모(42) 씨 집에서 김 씨의 아들(16 · S중 3년)이 자동차 차고 천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

○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 중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 유서를 남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⑥ '왕따' 여중생 투신자살 시도



◀ '엄마 아빠 보세요' 라는 말로 시작된 유서에는 '같은 반 친구 세 명이 못살게 굴어 죽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 지난 6월 29일에는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여중생이 쉬는 시간에 교실 밖으로 투신했으나 나무에 걸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건 발생

○ 서울 영등포구 모 중학교 4층 교실에서 이 학교 2학년 안모(13)양이 창문 밖으로 투신했으나 나무에 걸린 뒤 화단에 떨어져 팔 골절상 등을 입은 것

○ 안양의 언니(29)는 "동생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 중학교에 입학한 뒤로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며 "옷에 실내화 자국이 잔뜩 찍힌 채로 들어온 날도 있었다"고 진술

⑦ 60여 차례 학교폭력에 시달린 중학생, "아빠 살려주세요"

○ 여수에 사는 이군(13 · 중1)은 지난 3월 입학 이후 같은 반 2명과 다른반 동급생 1명 등 3명으로부터 일주일에 서너 차례 "돈을 안 주면 죽인다"며 폭행을 당한 후, 최근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함

○ 이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급기야 "아빠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며, "학교측에 반이라도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방치됐고, 이후에도 폭행을 당해오던 아들이 급기야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려 2주째 학교에도 못 가고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림

2) 문제학생의 학교장 직권 전학이 갈수록 늘고 있다

① 집단 따돌림 · 폭력 피해서 전학

○ 학교장 직권 전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 또는 가정 폭력에 시달릴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학교를 옮겨주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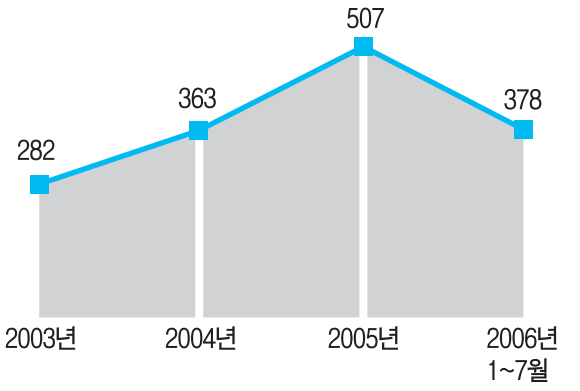
② 학교장 직권 전학 갈수록 증가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학교장 직권으로 전학한 학생은 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178명으로 총 378명인 것으로 집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교장 직권 전학자는 2003년 282명에서 2004년 363명, 2005년 507명으로 매년 증가

○ 사유별로는 부모 폭행 등 가정폭력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왕따 등 학교생활 부적응 97명, 학교폭력 30명, 이혼 19명 등

■ 학교장 직권 전학 증가 추이 (단위 : 명)



– 자료 :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3) 힘 없는 초등학생과 여학생 피해 늘어간다

① 초등생 10명 중 2명 학교폭력에 노출

○ 학교폭력의 피해 연령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

☞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2001년부터 올해까지 국가 및 민간기관이 벌였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1년 8.5%에 불과했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이 2002년 13.7%, 2003년 17.5%, 2006년 17.8% 등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초등학생 수(402만여명)로 따져보면 무려 72만여명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셈, 이는 충북 청주시 인구와 맞먹는 수치**

○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77%가 초등학생 때 처음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 (올해 중학생 피해율은 16.8%, 고등학생은 8%)

○ 초등학생들이 자주 당하는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따돌림 등으로 조사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

단위 : %

	초등학생 피해율	조사기관 / 조사대상
2001	8.5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전국 3,977명)
2002	11.2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전국 4,209명)
2002	13.7	국가청소년위원회 / (전국 5,687명)
2003	17.5	국가청소년위원회 / (전국 14,638명)
2006	17.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전국 3,910명)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② 여학생 피해자 7년만에 3배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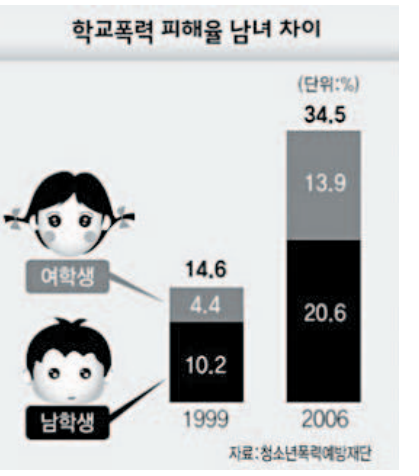
○ 여중고생의 학교폭력 문제도 날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청예단에 따르면 전체 여학생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99년 2.2%에 머물렀지만 2006년 조사에서는 6배인 14.2%로 증가

○ 피해자 비율도 99년 4.4%에서 2006년 13.9%로 3배 이상 증가

○ 특히 2006년 여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 비율은 14.2%로 남학생 가해자 비율 17.6%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





4) 폭력서클이 부추기는 학교폭력

☞ 가해자 95%가 중학생 때 폭력서클에 가입했다

① 전북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이었던 3월초부터 3개월간 파악된 가해학생 37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학교 1학년 때 폭력서클에 가입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② 가해 남학생 197명과 여학생 182명 중 189명(51%)이 중1 때 가입했고 96명(29%)은 중학교 2학년 때, 67명(18%)은 중학교 3학년 때 가입

③ 가해 학생 중 253명(68%)이 중학생이고 108명(29%)은 고교생으로 드러나 중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이 한층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④ 가해 학생들은 부모가 있는 경우가 275명(72.6%)으로 조사돼 결손 가정에서 폭력서클에 가입하는 학생이 높다는 기존의 조사와 상반된 것으로 드러남

⑤ 폭력서클 가입동기는 친구의 권유 142명(38%), 선배의 권유 69명(19%), 자기의 뜻 54명(15%) 등의 順



◀ 학교 폭력서클 '일진회(一陣會)' 가운데 중학생 소속 재학생 285명이 가입한 일진회 연합조직 '서울연합' 적발

- 중학교 교내 서클들이 모여 17개 구(區) 단위 지역연합이 만들어졌으며 이들 지역연합이 결합해 서울연합 결성
- 경찰에 따르면 서울연합은 2003년 초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군이 교내 폭력서클 회원들을 규합해 만든 지역조직
- 서울연합 회원들은 후배의 이탈을 막기 위해 폭행을 일삼았으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 받음
- 서울연합 중 오토바이폭주 모임 회원들은 국경일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역주행

2. 학교폭력 대책 이래서 실패했다

1) 피상적 사후대책에만 치중했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철저한 사전예방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피상적인 사후대책(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② 특히 정학과 유사한 출석 정지제는 비행학생에 대한 학교의 책임회피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

③ 출석정지 기간동안 가해학생이 학교 밖에서 또 다른 폭력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를 방치하고 이들 가해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교육이나 치료위주가 아니라, 징벌위주로 될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2) '인권교육'을 경시했다

① 학교폭력은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와 무관하지 않음

☞ **학교나 가정에서 부모나, 교사, 학생들 간에도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의 인권을 얼마나 해치고 침해하는지에 대해 대부분 무감각**

②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나 학부모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변화 없이는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이 학생교육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③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그 자체에만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권교육과 학생들의 평화적인 감수성을 길러내는 교육이 중요

3)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경시했다

①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의 경우 이들이 안게 된 심리적 상처와 기억은 평생 지속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겪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심리치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②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교육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는 언급되어있지 않음

③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의 경우, 실제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저소득층 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함**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미흡했다

① 학교별로 구성되는 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권이 교장에게 있고, 학부모나 기타 위원의 비율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교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큼

☞ **시행령에 위원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자치위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학교장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정해야 함**

②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단체가 결합해야 함

☞ **학교폭력의 문제는 그 지역사회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학교와 시민단체의 적극적 협력이 중요**

③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위의 회의 소집은 '년 1회 이상' 으로만 규정되어 있음

☞ **이런 애매한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가 이전의 학교폭력 추방위원회의 이름만 바꾼 조직에 불과할 수밖에 없음**

④ 자치위내에서 회의를 년1회 이상이라는 애매한 규정이 아니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예방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해야 함

⑤ 분기별 혹은 학기별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학교 내 폭력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학교폭력발생을 사전에 예방

5) 학교폭력예방교육이 미흡했다

① 시행령 제11조를 살펴보면 '교육의 횟수나 시간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있음

☞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전적으로 학교장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② 종례시간에 TV모니터를 통한 교장선생님의 훈화나 지역 경찰관의 1시간짜리 교육이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전부

③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횟수나 시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일회성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평화적인 감수성을 길러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

누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빼앗았나

발 행 일 : 2006. 12.
발 행 처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홈페이지 : www.hannara.or.kr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4-17
전　　화 : (02)788-2240
팩　　스 : (02)788-2787